

KIPF 공공기관

KIPF Public Institutions
Issue Focus

이슈 포커스

2015. **12**

vol. 14



공공기관연구센터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책임과 성과를 중시하는 지속적인 공공기관 개혁



박형수 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은 고용, 생산 등의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또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에너지, SOC 등 필수적인 공공재의 공급은 물론, 의료, 사회복지, 금융구제 등 다양한 기금을 운영하기도 한다. 공공성을 바탕으로 고유 사업영역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들의 신뢰와 만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시장에서의 경쟁 압력이 낮아 과도하게 규모가 커지는 등 경영이 방만해지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공운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통합적 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 이후 체계적인 공공기관 관리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쟁력과 효율성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다 보니 높아진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것은 어려웠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의 하드웨어적 개혁보다 소프트웨어적 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율과 책임, 그리고 성과를 중시하면서 지속적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개혁을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대부분 집권 초기에만 반짝하다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공공기관 개혁은 작아도 오래가고, 앞선 개혁을 바탕으로 후속 개혁이 계속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자율성 인정하되 책임과 성과를 중시

공공기관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한 1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정상화 과제를 제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밑바탕에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철학은 바로 공공기관의 자율성은 인정하되 책임을 바탕으로 한 성과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성과를 강조하는 것이 역설

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으나, ‘성과’를 단순히 시장논리에 의한 재무적·계량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개별 기관의 특성에 따른 성과 관리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분류되어 유형화되어 있다. SOC, 에너지 기관 등 고유목적 사업으로 기관 수입을 충당하는 경우 그 시장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이 이 유형에 속한다. 정상화 대책의 부채 중점관리 대상기관 18개 대부분이 이들 공기업이었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원인에 따른 맞춤형 관리 정책이 필요하며, 정책사업의 경우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무리한 사업 추진을 차단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장기적 사업전략이 필요한데 이 또한 책임과 성과가 담보되어야 가능하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특정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통해 각 기금의 조성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의 비판과 질타는 물론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처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다. 정책연구를 임무로 하는 국책연구소의 경우 기관의 규모가 공기업 등에 비해 작고 일반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업무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국민 관심과 언론 감시를 덜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정책방향 제시로 정부정책을 선도하고, 연구와 정책을 연계시켜 정책실패를 최소화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도 책임과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업무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개혁, 국민적 공감대 바탕으로 지속 추진해야

지난 2년간의 공공기관 개혁은 시작에 불과하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테면 공기업 부채문제의 경우 공공요금 사업은 원가보상률에 근거해 요금 인상의 기반을 마련하고, 원가보상률이 낮은 기관의 경우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또한 구분회계제도 사업을 내실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내부의 동의가 바탕이 되어 성과를 강조하고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국민경제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Contents

KIPF 공공기관 이슈 포커스 2015. 12

I 이슈 & Talk

- **검사·검증 공공기관 관련 이슈와 과제** 07
“국민안전과 시장논리 사이에서 균형감각이 필요합니다”

II 전문가의 눈

- **경영정보공시와 공공기관 부채비율** 20
이재완 원광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수
- **공공요금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25
이상철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
-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유형과 관리전략** 28
이민창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III 기관장 인터뷰

- **보편적 형제애에 기반을 둔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36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 **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IV 현장의 소리

- 내일을 위한 인재 양성의 지침서, NCS 56
양기훈 한국산업인력공단 NCS센터 원장
- 문화융성의 결실이 풍요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에 기여할 것을 확신하면서 58
이용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 국민의 행복한 노후준비, 국민연금공단이 함께합니다 61
김무용 국민연금공단 업무이사

V 정책동향

- '15~'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65
- 유사 및 중복 기능의 공공기관 통합 및 이관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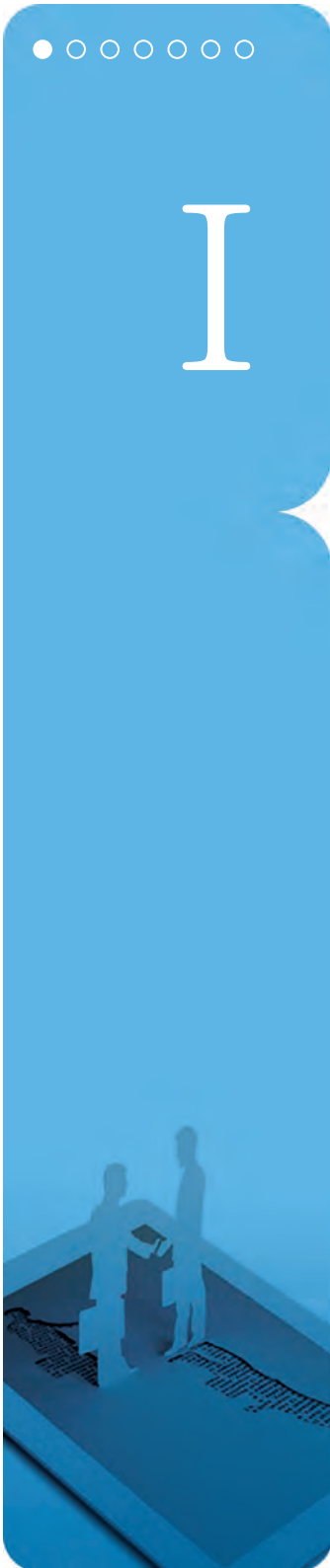
VI 해외동향

- 공공기관 관련 해외연구물 77

VII 센터소식

- 제3차 한·중남미 공공기관 국제컨퍼런스 개최 82
- 2015 공공기관 정책 워크숍 개최 107





이슈 & Talk

- **검사·검증 공공기관 관련 이슈와 과제**
“국민안전과 시장논리 사이에서 균형감각이 필요합니다”

* 이슈 & Talk는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좌담회입니다.
<편집자 주>

검사 · 검증 공공기관 관련 이슈와 과제

“국민안전과 시장논리 사이에서 균형감각이 필요합니다”



- 일 시: 2015년 10월 23일
- 장 소: 서울역 프리미엄 라운지
- 사 회
하세정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연구팀장
- 참석자
박종화(한국국토정보공사 기획조정실 부장)
배진민(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장)
탁송수(한국가스안전공사 전략기획부장)
- 정 리
박성훈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경영평가팀 연구원

하세정(사회자)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연구팀장)

오늘 논의할 내용은 검사·검증 공공기관과 관련된 이슈와 과제입니다. 먼저 각 기관의 핵심사업 중 민간과 경쟁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배진민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장)

교통안전공단에서 민간과 경쟁하고 있는 사업은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종합검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의 목적은 도로운행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자동차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무보험 등 불법자동차를 확인하여 국민 피해 예방·운행질서 확립·범죄를 예방하며, 배출가스 및 소음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 안전 등에 대한 정기검사와 배출가스에 대한 검사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이중수검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도록 종합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화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획조정실 부장)

저희 기관의 주 사업인 지적측량은 토지재산권 보호가 주목적이며, 지적제도는 토지거래, 등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분야로는 지적확정측량, 수치지적

측량이 있고, 2004년부터 민간 경합이 시작되었으며, 그 외 도해지적 분야는 공사가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계획 추진과정에서 저희 기관에 대한 기능점검 결과, 민간과 경합하고 있는 지적확정측량시장에서 2018년까지 철수하고,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던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등 품질관리 기능이 새롭게 부여되는 등 사업기능의 일부가 재편되었습니다. 새롭게 부여된 품질관리 기능은 지적확정측량의 민간 전담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보완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탁승수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략기획부장)

가스는 국민생활 및 발전·산업에서의 가스 사용뿐만 아니라 수소 등 미래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민간과 경쟁하고 있는 분야로는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와 자율검사가 있습니다. 주요 가스시설로는 고압가스 제조·충전·저장·판매 및 냉동제조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집단공급·판매시설, 도시가스 제조·충전·공급시설 등의 허가시설과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사용시설이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이러한 가스시설이 가스관계 3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1~2년 또는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며, 자율검사는 허가

시설 사업자가 연 1회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로 자율검사장비 및 자율검사요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가 우리 공사 또는 민간검사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가구의 99.9%인 21,949천가구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료가스 소비량은 44,324천톤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6.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청정하고 편리한 에너지원의 선호로 약 120만에 이르는 요식업소 등 영업용뿐만 아니라 가정 내 생활연료로 자리 잡아 취사용이나 난방용으로 가스사용이 일반화되었고, 산업발전에 따른 발전용 연료 및 석유화학 등 산업체의 주요 원료와 연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CNG버스·택시·LPG자동차 등 가스차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핵심 사업분야에서 시장이 어떻게 개방되어 있고 어떤 상황을 이루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진민

1997년 4월 자동차 검사부문이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되었습니다.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업무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2015년 8월 기준 자동차검사소 현황을 보면 공공검사소 58개, 출장검사소 52개 등 총 11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정비업체의 경우 17개 시도에서 1,70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자동차 검사대수가 약 1,000만대 정도 되는데 대수 기준으로 공단이 약 30%, 민간이 약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박종화

지적측량사업은 2004년부터 민간과의 결합이 시작되었습니다. 민간에서 수행하는 분야는 지적확정측량과 수치지적측량입니다. 시장점유율 현황은 2014년 기준 공사가 약 55.3%, 민간이 약 44.7%로 금액은 공사가 약 404억원, 민간이 약 327억원 정도가 됩니다. 민간업체는 약 158개 정도가 있는데, 폐업·등록 등으로 매년 변동되고 있습니다. 이 중 상위 5개 업체가 약 2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자

확정지적측량과 수치지적측량분야가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박종화

2014년 금액 기준으로 개방시장이 약 22% 정도입니다. 면적 기준으로는 약 5% 정도이기 때문에 면적에 비해 금액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탁송수

가스분야 민간검사기관은 전문검사기관과 공인검사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문검사기관은 용기 등 제품에 대한 재검사

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5년 우리 공사에서 전문검사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공인검사기관은 민간과의 경쟁 정책에 의해 1990년 후반에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것은 2000년대 중반 부터입니다. 현재 정기검사분야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특정가스 사용시설, 자율검사분야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충전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시설(비독성과 비가연에 한함)이 우리 공사와 경쟁 체제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는 공인검사기관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민간검사기관 운영체계를 말씀드리면, 검사기관은 지정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친 후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게 되어 있어 지정된 기관만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검사기관이 경쟁할 수 있도록 조례화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제한경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사대상 시설별 시장점유율이 상이하나 경쟁체제가 도입된 지역에서 도시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공사와 검사기관이 대략 6:4 정도입니다.

사회자

공사에만 맡기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탁승수

그렇습니다. 한 때 정부 정책 방향이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어서 일부 지역의 경쟁 체제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일부 지역은 안전은 경쟁으로 담보할 수 없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검사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

실질적으로 정기검사의 경우 도시가스시설과 냉동제조시설만 공사와 민간업체가 경쟁관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LPG 사용시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분야의 경우 경쟁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민간에서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탁승수

경쟁논리 속에서 법제화는 되었지만 민간 검사기관이 선불리 진입할 분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민간검사기관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LPG 사용시설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로서 음식점이나 영업점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2~3만원 수준입니다. 반면 LPG 시설 관련 사고위험은 상대적으로 높고 공급자에 의한 안전관리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 이어서 검사기관의 위험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수료도 큰 메리트가 없다 보니 제도화가 되었음에도 현재 까지 특별히 민간검사기관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자

다음은 시장 개방 관련입니다. 해당 사업이 어떻게 태동했고 민간과 공공이 처음에 어떻게 시장에 참여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살펴보면 시장관리의 방향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컨대 민간이 하던 업무가 왜 공영화되었는지 알아보면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진민

자동차검사가 시작된 지는 약 100년 가까이 됩니다. 1917년 경찰청에서 검사업무를 하다가 1962년에 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한국자동차검사협회라는 민간단체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1975년도에는 여러 문제로 인해 한국검사대행공사라는 유한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민간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 1981년도에 교통안전진흥공단을 출범시켜 공영화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공공-민간 검사 이원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민간이 시장에 참여하게 된 것은 당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설 미확충, 수검 불편 등 검사인프라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민간에서는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 폐지에 따른 수입 보전, 자동차 검사를 통한 수입 확보 등을 위해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반면 공공이 시장에 참여하게 된 것은 민간 정비업자의 검사 부조리 만연, 과잉정비,

검사시설 현대화 기피, 개선명령 불이행 등 자동차 검사제도가 정비업자의 영리수단으로 악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당시 정부가 공영화를 결정하여 교통안전진흥공단을 출범시킨 것입니다.

박종화

저희 사업의 경우 처음에는 1910~1923년까지 조선총독부에서 국가고유사무로 토지 및 임야 조사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 후 1923년부터 1938년까지 경쟁체제인 지정측량사제도를 도입·운영하였습니다. 이후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지적협회에 의한 전담 대행체제가 마련됩니다. 전담체제로 바뀐 이유는 개인측량업 형태로 가면서 과당경쟁, 시장성이 부족한 곳에서의 서비스 미제공 등 폐단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해방 후 1948년까지는 국가 직영체제로써 미군정이 직접 측량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948년부터 1977년까지는 대한지적협회에서 전담 대행을 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조선지적협회가 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7년부터 2003년까지는 대한지적협회를 전신으로 하는 대한지적공사가 출범하여 공사 전담체제로 운영되었으나, 2004년 지적법 전면개정을 통해 지적측량업 등록제도가 시행되어 민간참여가 허용되었고, 지적공사는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금년 6월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과거 개인측량업 자유경쟁체제에서의 문제로는 업무수탁을 둘러싼 과당경쟁, 수익성에 치중한 선별적인 사업 수행 등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도 자체가 부실화된 것입니다.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성과관리나 측량 품질에 있어 문제가 생겼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의 원인은 대부분 이 시기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두 기관은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재산권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사실 측량한 것이 문제로 드러나기까지는 매우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일단 건물을 지으면 재건축을 하거나 신도시 등을 조성하기 전까지는 새로 측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분야에서 항상 고민스러운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입니다. 예컨대 등록업체가 폐업하면 책임질 곳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기관에서 담당함에 따라 30~40년 전에 생긴 문제도 시효 없이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지만 민간에서 담당하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탁송수

1960년대에 들어 고압가스 수요가 점차 늘면서 가스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자 가스안전관리 문제가 관심사로 등장하였으며, 1962년 고압가스 제조·저장·운반·소비과정 전반을 규제하는 「고압가스 등 단속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71년 12월 서울 대연

각호텔에서 LP가스 폭발사고로 16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가스연료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경각심이 계기가 되어 1973년 2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현재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전신인 ‘고압가스보안협회’가 1974년 1월 출범하였습니다.

고압가스보안협회 설립 당시 가스시설이 많지 않았고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분야에 종사하던 전문인력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협회가 출범하면서 가스시설과 제품 검사, 안전교육,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새롭게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가스시설의 증가와 대형사고의 후속대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산업화에 따라 새로운 검사분야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4년 아현동 가스폭발사고에 이은 1995년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는 가스안전관리체계 선진화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공사의 안전관리 업무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러한 안전관리 업무에서 민간의 참여 여지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1990년대 후반 공공기관과 민간 경쟁을 유도하는 각종 정부 정책으로 민간검사기관의 검사권이 제도화되었고 이후 민간이 시장에 참여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경쟁분야와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시장경쟁 외적 부분에서 기여하고 있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을 규제·교육하는 등 공공성 위주의 다양한 기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진민

민간의 자동차검사시장 참여를 통해 정부의 부담이 경감되는 순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실검사, 검사 신뢰성 등이 항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민간은 정부의 안전사업 일부를 담당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수익성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국민안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장논리에 편승하는 민간을 견제하고 자동차 검사기술이나 제도 운영을 선도할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의 발전을 위해 민간은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단의 시장참여를 인정하고, 공단은 민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파트너로 인정하여 상생·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도 있겠지만 잘못되면 향후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담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간 쪽의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

들은 우리는 부실검사·과잉정비를 하지 않는다, 제도가 그렇게 부실하지 않다, 민간업체에서 검사 부적합률이 낮은 것은 미리 예방정비를 하고 검사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배진민

여전히 민간업체의 부실검사에 대한 개선 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적합률을 보면 2014년의 경우 민간이 약 12%, 공단이 약 19% 정도입니다. 민간업체에서는 사전점검을 충분히 해서 부적합률이 낮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만, 사전점검 비율은 0.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주장은 현실과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자

그런데 민간이 부실검사를 해서 이 자동차들이 전반적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최근 교통사고 자체는 과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민간의 시장점유율이 70%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교통사고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면, 혹시 민간이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 있어 확인한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닌가, 민간 참여에 의한 문제점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배진민

교통사고 통계에 있어 자동차 결함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일부 사고는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인지 운전자의 과실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통계상 인적 요인이 약 80%, 도로환경적 요인이 약 10%, 차량 요인이 약 10%가 되고 있는데, 전체의 10%를 가지고 그러한 주장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교통사고,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것이 대형버스나 대형화물차 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형버스의 경우 셀프 검사로 약 99.5%가 합격되고 있습니다. 대형화물차의 경우에도 민간업체의 점유율이 거의 90% 정도 됩니다. 공단의 점유율이 매우 크다면 좀 더 명확한 데이터를 얻어 그러한 주장을 면밀히 검증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종화

공공기관이 민간과 경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민간의 역량이 충분하거나 민간에 맡겨도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 업무의 전체적인 특성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성 문제를 반드시 수반하

게 됩니다. 시장논리가 되었던 사회 트렌드에 따르는 것이든 민간에 역할을 넘길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 분야를 어떻게 같이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적측량분야의 경우 앞으로 민간이 수행한 측량품질에 대한 책임을 국가든 누구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책임을 국가가 지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 국가기관인 저희 공사가 책임담보하는 품질관리 기능을 수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사에서는 민간에서 수행하는 측량품질의 향상을 위해 기술지원, 교육의 역할 수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고 육성하는 역할,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역할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회자

공공기관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면 공공기관의 효율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기재부 등도 이러한 전제에 입각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순기능도 있겠지만 경쟁을 강조하다 보면 국민 보편적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화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의 질은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국민 친절도를 비롯한 기관별 고유 서비스의 질은 그 원인별

해결방법을 제도적 장치로써 향상시키도록 하는 접근방식이어야지, 덮어놓고 민간과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는 더 큰 부작용을 유발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천적으로 업체 간 가격경쟁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수수료 제도가 민간업체 간 완전경쟁체제에서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테고, 기술적으로 미성숙된 시장에 의해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때에 발생될 지적재산서비스의 품질 하락과 측량성과 오류에 따른 각종 소송과 사회적 비용 증가, 그리고 민간업체의 특성상 수익성에 치우친 선별적 서비스 제공에 따라,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가제도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탁송수

저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고객 만족에 대해 강도 높게 평가하고 끌고 갔던 것이 더 주효했다고 봅니다.

사회자

민간과의 경쟁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의한 측면이 더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탁송수

그렇다고 봅니다. 또한 안전에 있어 경쟁

논리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은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반면에 공공기관은 공익성을 담보로 하기에 존재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민간검사기관은 검사인력과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검사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모든 검사시설에서 발생하는 민원 등 고객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매년 12월이면 검사대상에서 검사가 누락된 곳이 있는지, 민간검사기관에 검사 신청이 되어 있으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없는지 등을 파악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사가 전담했을 때보다 인력 등 자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자

사각지대 관리를 하다 보니 공공이 전담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자원이 투입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탁송수

가스안전 관련 민원은 우리 공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포괄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전에 있어 경쟁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민간 안전산업을 육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세성이나 부실화로 인한 저가 수주경쟁이나 각종 비효율·부적절 사례가 나타나지 않

도록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인력에 대한 체계화, 진입·퇴출에 대한 세부 평가체계, 검사능력 측정 및 기준 수립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반을 갖추고 민간에서 수행하기에 적절한 분야를 발굴하여 끌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종화

공공성 측면에서 보면 지적측량은 국가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분야에는 이미 민간 참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여가 허용된 분야에서 공공과 민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민간을 활성화하고 육성한다고 하지만 서로 경쟁구도가 되었을 때 그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민간과 경쟁하면서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경쟁력을 그대로 전수하고 지원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로 역할이 분리되어야 당초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민간은 민간에 적합한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공공기관에는 관리감독 등 심판관 역할을 부여하여 시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민간이 업무를 수행해도 그 품질과 책임성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만큼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교통안전공단의 향후 시장참여 방향은 어

떻습니까?

배진민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용자동차 안전 강화 방안입니다. 버스, 대형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는 사고 시 대량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을 가지므로 안전기준 강화 및 공단의 검사를 통해 정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둘째, 검사기술 및 제도 선도 방안입니다. 자동차 제작기술과 검사기술의 격차를 줄이고 전기·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로의 변화 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해 검사기술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고, 도출된 연구결과는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자동차검사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공공-민간 소통 강화 방안입니다. 국회, 정부, 지자체, 민간 등과 소통하는 세미나를 오는 11월에 개최하는 등 정기적인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넷째, 국민 체감형 검사서비스 제공입니다. 검사결과 설명방식 개선, 검사 홍보채널 다양화,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방안 홍보 등 국민이 공감하고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각 기관에서는 사업수행 자체는 민간에 이

양하고 대신에 극단적인 경쟁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공공에서 관리·감독하는 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탁송수

저는 일단 반대 입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간검사기관의 역량과 제반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민간에서 공사만큼의 인력과 기술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우므로 부실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계의 전반적인 역량을 공사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이에 수반되는 상당한 투자를 하도록 할 유인이 없다고 봅니다.

배진민

관리·감독권은 정부의 고유권한이지만 현재 공단에서 충분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정업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기술지원 등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 도와서 검사부분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끌어가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사회자

민간의 역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완전히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자동차검사같은 경우 산업 특성상 장기적으로는 민관이 자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진민

자동차검사업무는 시장논리로 가다 보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논리에 앞서 안전이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큰 목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이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견제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이 전담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국토정보공사는 시장을 민간에 이양할 예정입니다. 소감이나 염려 등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박종화

자동차안전, 가스안전과 마찬가지로 저희 지적측량업무도 보편적 대국민서비스입니다.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논리가 적용되면 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소외되는 지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서비스 문제를 누가 해소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것입니다.

민간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시장논리에 입각하여 지속적으로 민간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앞에서 두 기관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합하는 분야에 있어 저희처럼 완전 철수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육성·지원·관리정책을 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2018년부터 지적측량 성과 품질관리 등 민간전담에 따른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었으므로 책임을 다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배진민


우리나라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안전과 환경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동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선도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참여 활성화라는 큰 흐름이 존재합니다만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균형감각을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박종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과 보편적 서비스는 단순히 시장논리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참여를 통해 활성화 또는 발전적 모델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격이 아니라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책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합니다. 책임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 합니다.

탁송수

우리 공사는 안전산업 육성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공공성이 낮은 업무를 중심으로 민간이 진출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IT 융합기술에 기반한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등 기술·제품 개발과 지속적인 민간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에서 수행이 가능한 자율검사 및 진단업무의 단계적 이전,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공급자 안전관리가 미흡한 액화석유가스 비검사 대상 사용시설에 대한 민간 안전관리 대행기관 도입 추진 등 신규 안전산업 발굴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기관의 비효율·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역량 제고와 공정성 확보를 견고히 하기 위한 제도구축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의 경쟁이라는 이슈로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공공기관연구센터 및 하세정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II

전문가의 눈

- 경영정보공시와 공공기관 부채비율
이재완 원광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수
- 공공요금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이상철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
-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유형과 관리전략
이민창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 **전문가의 눈**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공공기관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칼럼입니다. <편집자 주>

경영정보공시와 공공기관 부채비율

공공기관의 경영정보공시 시행과 공시항목의 확대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임직원들의 불합리한 행동을 감시하고 방만한 경영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여진다.



이재완

원광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수

최 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07년 249조 2천억원에서 2012년 493조 3천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2년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국가채무보다 10%나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을 민간기업 공시시스템(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수준으로 전면 개편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이행과 경영상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정보공시가 이루어지면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일반국민들이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이나 부채 감축 노력 등을 직접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어 책임성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영

정보공시는 부채 누적으로 인한 파산위기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기관의 내부 경영보다는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을 공공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추진하거나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통제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단순히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하기보다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모든 재정활동과 국가예산 등을 공개하여야 공공기관의 부채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경영정보공시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관행을 개선하고 부채를 감축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존재한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경영정

* 본 내용은 2015년 9월 24일, 제7차 공공기관 네트워크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토론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보공시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민간부문에서 발달한 경영정보공시의 효과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한다고 짐작된다. 민간기업 공시의 정보효과에 관한 이론들은 Spence의 신호모형(Signaling Theory)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신호모형에 따르면 정보공시를 통해 경영자들이 기업가치에 관한 정보를 시장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몇 가지 동기가 존재한다. 첫째, 주의집중 가설(Attention Hypothesis)로서, 기업의 재무행위 공시 그 자체가 공시 이전보다 투자자들로부터 그 기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해낼 수 있다고 한다. 둘째, 정보내용 가설(Information Content Hypothesis)로, 기업내부의 경영자와 외부의 투자자 사이에 정보 불균형이 존재하면 내부정보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 활동에 대한 공시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평판 가설(Reputation Hypothesis)로서, 기업이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영자들이 재무정책을 공시하여 내부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기에 의해 정보공시를 하면 주식 시장에서 반응을 일으켜 주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주가를 의식한 경영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민간기업과 같이 정보공시에 의해 주식시장의 반응을 유발하기 어려운 공공부문의 경우는 그와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가 정보공개 효과에 관한 논의들이다. 공공부문의 정보

공개 또는 공시는 거시적 차원에서 주로 민주성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right-to-know)를 실현하고 정보를 가진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시적 차원에서 관련자들의 행태 변화를 유도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첫째,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이론으로, 정보공개는 거래당사자들 간의 거래비용, 특히 정보수집비용을 낮춰 계약이나 협상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둘째, 외부성(externality) 논의로, 정보공개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키는 장치로써 활용된다고 한다. 셋째, 집단행동의 딜레마 이론으로, 정부가 정보공개를 통해 정보비용을 절감해 주면, 모든 행위자들의 집단행동 참여 가능성이 높아진다. 넷째, 심리학적인 동기이론 측면에서도 정보공개는 사람들의 위협 인식에 영향을 미쳐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게 만든다고 한다.

공공부문에서 정보공개가 유도하는 행태 변화의 구체적인 효과로는 첫째,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화학물질 배출량을 정부가 공개하면 공장의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둘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도 있는데, 수도물의 수질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면 수질이 향상되는 것이 그 예이다. 셋째, 정보공개는 서비스 제공에서의 사회적 차별이나 불평등을 완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나 담보제공 등에서 인종, 성별,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이 대출률과 담보율 정보를 제공하면 제거되는 것이다. 넷째,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면 부패를 낮출 수 있는데, 판공비 지출 정보를 공개하면 부적절한 집행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행태 변화 유도의 구체적인 효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억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정보공시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도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관련행위자들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여 방만한 경영행태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에 필자는 공공기관의 경영정보공시가 과연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라는 지표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부채 상위기관들 중 자료수집이 가능한 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데이터를 확보하여 패널 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모형에는 여러 연구들에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자산규모(총자산), 정부지분율, 요금통제 등을 포함시켰다. 그 분석결과,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황에서 경영정보공시가 시행된 경우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알리오(Alio) 시스템을 통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공시가 경영의 투명성 증가

와 함께 책임경영을 강화시켜 재정건전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경영정보에 대한 공시는 부채비율 증가 또는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위험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불합리한 행위를 통제하여 책임경영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민간기업과 같이 주식시장의 주가를 통해 경영자나 직원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경영정보공시는 임직원들의 심리적 동기나 책임의식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분석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그간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경영정보 공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즉 학계나 시민단체, 정부의 감독기관에 의해 꾸준히 강화되어 왔던 경영정보공시 확대가 어느 정도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영정보공시 시행과 공시항목의 확대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임직원들의 불합리한 행동을 감시하고 방만한 경영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최근 투명성과 효과성에 관한 관계가 비례적인 선형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투명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인지상의 한계로 인해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과도한 정치화를 초래하여 효과성을 낮춘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투명성은

아직 이러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경영정보공시 수준을 확대하는 데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이다. 그리고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정보공시와 관련하여 공시정보 미입력, 입력상의 오류, 불성실 입력 등 공시된 정보의 품질 문제로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공시품질 보증을 위해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로 고의성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별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이 내년에 도입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공시에 의한 투명성 확보가 책임경영 강화로 연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토론내용

김봉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채문제가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과제의 하나로 주목받는 시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경영정보공시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만, 조사대상과 데이터를 선택한 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부채비율의 특성상 매년 경제상황과 정부 정책 등 여러 외부요인에 의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차를 두고 공시 여부와 부채의 관계를 측정했을 때는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분석하는 등 경영정보공시의 수준

이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박한준(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경영평가팀장)

대형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나, 이들 기관을 선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부채감축 중점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18개 기관 및 방만경영 관리대상 38개 기관으로 확장하는 등 다양한 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대표 기관으로 분석하더라도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와 함께 2013년 공공기관 부채관련 논의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부채감축 계획 및 자산매각을 통한 정책 등에 따른 성과와 경영공시에 따른 부채감축 효과를 분리하고, 정부 소유 지분율, 상장 여부 등 주요 변수를 고려하며, 2005년 알리오 시스템 도입 이전 자료를 사용하는 데 따른 제한적 효과를 감안한다면 더욱 정밀한 분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엄석진(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투명성은 현대 민주정부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기본 가치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볼 수 있다. 투명성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 절차, 기능,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핵심으로 하며 최근 ICT의 발달에 힘입어 세계 각국에서도 투명성 제고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알리오' 시스템 역시 공공

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영정보공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정확성, 시의성, 접근성, 통합성, 논리성, 책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를 언론, 학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기관사례 발표


최영호(한국석유공사 경영혁신팀장)

- 알리오(ALIO) 주요 공개정보 : 기관 일반현황(연혁, 주요기능 및 역할 등), 기관운영(임직원 수, 보수현황 등),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주요사업 및 재무정보 등), 대내외 평가(국회, 감사원, 경영평가 지적사항), 정보센터(채용정보, 입찰정보 등),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부채정보, 복리후생 관련정보 등)
- 기관 공시관리 체계 : 작성부서(12개 부서/22개 팀)는 정확하고 누락없는 철저한 공시 이행을 담당, 총괄부서(전략기획실)는 공시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전파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 확인부서(감사실)는 자체 점검 프로세스에 입각한 정밀 점검 및 피드백을 담당
- 애로사항 : 1인 단독공시에 따라 내부확인 및 검증 미흡, 현업 담당자의 공시기준 이해도 부족, 전후 점검 및 관리 체계 미흡
- 해결방안 : 공시자료에 대한 내부확인/검증 절차 공식화, 업무 담당자의 의식변화 유도,

공시 담당자 신규발령 시 감독부서 주관의 1:1 교육 시행, ‘공시 실무자 협의체’ 구성을 통한 소통 강화, 수시공시 누락 및 지연 예방을 위한 ‘사전 자가점검 제도’ 도입

- 이행성과 : 기재부 경영공시 일제점검 시 불성실공시 별점 대폭 개선, 불성실공시 사후조치 대상기관에서 제외 등

이원근(한국토지주택공사 기획조정실 부장)

- LH 부채 구성 및 특징 : 2015년 상반기 기준,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로 구성, 금융부채는 이자부담부채로 장기 투자/회수 구조상 조달기간이 장기적이며, 비금융부채는 임대, 분양물량이 증가할수록 임대보증금과 분양선수금 부채가 증가
- 부채관리 목표 및 성과 : 부채비율 300% 이하, 금융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을 목표로 이는 2015년 6월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목표, 금융부채가 2014년 최초로 감소 전환함으로써 재무개선의 전기 마련,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업방식 다각화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정책사업 목표를 동시에 달성
- 부채관련 경영공시 : 알리오(ALIO)에 요약 재무상태표, 장단기 차입금 현황, 상세 부채 정보를 공시, 전자공시(DART) 시스템에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 LH 홈페이지에 요약 재무상태표, 장단기 차입금 현황, 부채감축계획, 사채발행현황, 구분 회계정보 등을 공시, 공공기관 최초로 부채시계를 설치 

공공요금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비용이 들더라도 공공요금 사후 메타 평가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공공요금 적절성에 대한 검증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상철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

박근혜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정책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영화 등 공기업에 대한 정책적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적이 없고 또한 계획대로 진행된 적도 없었다. 늘 용두사미에 그치고 말았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의 이러한 실패를 거울삼아 조금 다른 공기업 정책을 제시하였다. 민영화와 같은 정치적 이슈보다는 내부 경영관리적인 실천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대통령 인수위원회, 2013). 공기업의 부채문제와 방만 경영 해소를 핵심 과제로 하는 소위 '공기업 정상화' 를 화두로 내세웠다. 공기업의 부채문제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기업 부채의 주된 원인이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런데 공기업 부채문제가 과연 공기업의 방만 경영만 해소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필자의 관찰에 의하면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공기업 부채에 일부 원인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였다.

공기업 부채의 규모와 부채증가의 원인

2014년 말 현재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520.5조원으로 2010년 대비 약 30% 증가하였고, 공공기관 전체 부채의 대부분(72.4%)을 30개 공기업(시장형 공기업 14개, 준시장형 공기업 16개)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 전체 부채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적정요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6개 공공요금 공기업(전력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90.6%를 점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

* 본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채문제만을 두고 본다면 사실상 다른 316개 공공기관 전체를 피곤하게 할 필요없이 6개 공기업 부채 문제만 해결한다면 풀 수 있는 문제이다. 국회예산처(2014) 등 많은 공적기관에서 공기업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은 정부의 국책사업을 공기업이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정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정책에 따른 영업손실 누적에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연료비 등 외생변수에 의한 경직성 비용이 97%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방만경영 개선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지극히 미약하다.

공공요금 대상 공기업에서는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에서 제시하고 있는 2017년까지 200% 부채비율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을 일시적인 사업조정(187,203억원, 47.4%)이나 자산매각(81,876억원, 20.7%)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정부 경영평가에서 부채문제의 비중을 크게 다룬 2014년에

108,533억원, 부채 감축 목표연도인 2017년에 134,151억원을 설정하여 다른 일반연도에 비해 4~5배 많은 감축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무개선보다는 일시적인 소나기 피하기 식의 대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요금 정상화의 장애요인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공기업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는 공공요금을 정상화하지 않고는 공기업의 부채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요금 산정의 원칙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요금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선 공기업은 요금조정의 근거로서 총괄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원가산정 정보에 대한 비대칭적인 접근성을 이용하여 원가를 의도적으로 부풀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감사원(2014)에서는 가스공사의 경우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다양한 방식에서 원가산정

<표 1> 공기업 연도별 지구노력 계획

(단위: 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사업조정	5,552	25,608	38,048	50,249	67,746	187,203
자산매각	1,836	23,814	38,905	2,921	14,400	81,876
경영효율화	1,003	11,828	10,989	12,779	11,329	47,929
수익성 확대	0	22,471	2,524	-476	15,475	39,993
자본확충	1,604	439	12,058	1,208	1,285	16,594
기타	42,963	24,373	-77,617	8,017	23,916	21,652
총계	52,958	108,533	24,907	74,699	134,151	395,247

자료: 기획재정부(2014)

상의 오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른 공기업에서도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을 공시하고 있는데, 국회 제출용으로 민간 회계법인에서 발표한 원가보상률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공사의 경우 공기업 자체에서 산정한 원가보상률 84.0%는 회계법인에서 산정한 137.5%보다 무려 53.5%p의 차이가 나고 있다.

<표 2> 원가산정 주체별 원가보상률(11년 기준)

(단위: %)

산정주체	전기	가스	도로	철도	수도
공기업	87.4	87.0	84.0	84.8	84.9
회계법인	94.0	103.6	137.5	78.3	110.0

자료: 서울신문(2013)

한편, 주무부처에 제출된 요금조정안은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원가와 요금조정안에 대해 독립적인 심의와 검증을 하여야 하지만 기능적 독립성과 충분한 심의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요금산정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일례로 이 심의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금(안)에 대해서 가/부만을 결정하고 있고 실질적인 심의는 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요금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과 맞물려 있다. 공기업의 총괄원가를 보상해 주는 수준에서 공공요금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산정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것도 공공요금 정상화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요금 정상화 방안

현행 법규하에서 공공요금 산정 원칙은 공정보수주의(rate of return)에 입각하여 서비스 공급에 투입된 총괄원가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요금 산정의 첫걸음은 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금 산정방식과 내용이 제출하는 기관마다 다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공공요금 결정 방법과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후적인 메타 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비용이 들더라도 공공요금 사후 메타 평가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공공요금 적절성에 대한 검증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현행 공공요금 결정 절차로는 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정부부처와 독립적인 심의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원가를 검증하고 더 나아가서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심의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요금 결정을 제3의 독립기관에 맡기는 미국의 卍공익사업위원회(PUC; Public Utility Commission) 제도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조성봉, 2013; Littlechild, 2009).

한편, 현행의 공정보수주의식 공공요금 결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공정보수주의에 입각한 총괄원가 보상방식은 공기업의 원가절감에 대한 동기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상한제(price cap)와 같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인위적 감독보다는 공기업이 스스로 서비스 공급비용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슈
포커스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유형과 관리전략

「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법적 유형, 해외 진출 사업 유형, 해외진출 대상국의 정치적·경제적 환경 등 매우 다양하고도 복잡한 여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



이민창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은 그 목적과 수단
이 매우 다양하며,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유형도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이 강조되면서 마치 하나의 유행처럼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해외진출을 강조하는 정도에 비해 볼 때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성과를 보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설명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또 실무적으로도 많은 한계를 가진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해외진출 사업 유형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각 기관별 해외진출 동기도 다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 내지는 해외진출에 관한 이론적 접근 시각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를 곧바로 공공기관의 문제에 대입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여부는 어떤 기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은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선 공공기관이 해외에 진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공공기관이 해외진출을 모색하게 되는 현실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공공기관의 세계화 전략이다. 공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환경이 변화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공공기관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수요에 맞추어 해외 진출을 계획하거나 기왕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유형을 구체화하고 시장 수요에

* 본 내용은 2015년 10월 30일, 제8차 공공기관 네트워크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토론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부응하는 증장기 목표의 실현 과정에서 해외 진출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기도 한다.

공공기관이 해외진출에 관심을 갖는 두 번째 이유로는 공공기관 사업 다각화 전략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와 급변하는 서비스 공급 구조, 민간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공공기관이 국내 시장에서 성장 침체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국내 기업 지원이라는 공공성을 띤 신사업영역의 개척과 함께 사업 다각화의 기회를 해외에서 찾을 수 있게 되며, 해외 사업에서 시장 지배력 확보와 수익 확대를 통한 기관 경영수지 개선을 포함한 새로운 조직 목표를 수립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의 세 번째 이유로는 공공기관의 국가 정책 수행을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교 관계에 의해 우리나라의 주요 기능이 상대국가와 협력하거나 전수되어야 하는 경우 등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 사업을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많은 공공기관들이 해외진출을 모색해 왔고, 실제로 다양한 이유에서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이론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이 분야에 대한 유형화를 통해 비록 그것이 시론적인 것일지라도 해외진출 유형에 따른 관리 전략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특히, 직접 투자 사업은 민간기업의 투자 사업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은 민간기업의 진출에 비해 볼 때 비탄력적인 경

우가 많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로 인하여 공공기관은 민간기관이 가질 수 없는 공신력과 브랜드 파워를 갖게 된다. 공공기관이 해외진출을 할 때 해당 기관의 동기 유인(진출목적)과 활동유형이 무엇인지를 분석적으로 정리해 봄으로써 몇 개의 유형에 따라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강조하여 관리해야 할 기준들이 무엇인지를 도출해 볼 수 있다. 그동안 해외진출을 시도한 많은 공공기관의 사업들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공공기관이 수익성 확보를 목적으로 진출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이 국가 정책적 목적을 띠는 경우와 순수하게 기관의 결정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기준으로 채택하여 현실 사업들을 분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해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면 투자형 진출, 신성장 사업형 진출, 원조형 진출, 초기 관계형 진출 등의 유형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번째 유형으로 투자형 진출은 해외진출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사업 위험 부담을 감내하면서 자본을 투자하는 유형의 사업을 말한다. 투자형 해외사업 진출은 그린 필드형과 브라운 필드형으로 나누어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린 필드형 진출은 신규 사업에 진출하여 사업 발주의 기획, 타당성 분석, 시공, 운영 등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BOO, BOT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100% 지분을 갖는 방식 혹은 100%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단독 참여 방식과 국내 민간기업 컨소시엄, 국제 컨소시엄, 다자간 개발은행 발주사업에 단독 혹은 컨소시엄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브라운 필드형 참여는 기존 시설에 공공기관이 지분을 투자하여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회사에 지분을 구입하여 인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참여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 짧은 시간 안에 참여 기관을 대형화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이자 매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업들은 일면 공공성을 띠고 있지만 사업 기획에서 관리 운영의 전 과정이 해외의 민간기업 혹은 일부 국가의 공공기관들과 경쟁해야 하는 시장 속성이 강한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관리 원칙을 모색하려면 시장 탄력성을 보장하면서 최종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기준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탄력성의 보장이란 공공기관이 시장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 자율성과 운영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유형에서는 경제성이 중요한 관리지표가 된다. 보수적인 B/C 분석, F/S 분석을 통한 사업의 사전검토 활성화, 사업 과정 중 모니터링 장치, 최종 성과평가 및 환류장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운영함으로써 경제성을 확보하는 관리 노력

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신성장 사업형 진출이 있다. 이 유형은 공공기관이 본래의 고유 정책목적과는 거리가 있지만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경우를 포괄하여 설명한다. 공공기관이 설립 당시의 사업 목표를 완수하였거나, 완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공공기관 스스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조직 변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해외 사업에 진출하는 사업유형이다.

이 유형은 공공기관이 새로운 사업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급히 구현해야 할 정책성 사업은 아니지만 기관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유형에 속하므로 경제성 관리와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관리지표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유형의 사업들은 초기부터 곧바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 과정의 능률성 관리, 사업의 안정성 등이 또 다른 관리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의 신성장 사업 영역에서는 공익성도 관리기준으로 함께 고려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신성장 사업 영역 개척과 해외진출 과정에서 국내 민간기업과 동반 진출 사업 발굴, 수익모델의 개발 과정에서 새로운 공적 제도의 개발 등과 같은 공공기관 고유의 업무를 발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세번째로는 원조형 진출이 있다. 원조형 진출은 대외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무상원조사업과 유상원조사업의 형태를 빌려 추진하

는 해외진출 사업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상원조사업(ODA)은 외교부 산하의 KOICA가 관장하고 있으며, 유상원조 사업인 유상 차관 제공 사업은 기획재정부 산하의 한국수출입은행 협력기금(EDCF)에서 관장하고 있다. 원조형 사업기금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사업의 형태를 살펴보면 교육지원, 초청교육, 생활지원, 의료지원, 봉사 파견, 도로 및 교량 등 SOC 건설과 유지보수 등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유형은 수익성을 배제하고 정책적으로 수원국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업을 발굴하여 진출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수익성을 배제한다는 기준의 의미는 이 유형의 사업들이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혹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부과되는 의무에 부응하여 수원국가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이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사업비용이 원조기금에서 지원되는 국제 원조사업이 대부분 이 유형의 사업에 속하게 된다.

이 사업은 대부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소기의 사업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도 즉, 효과성을 관리지표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조사업의 재정 관리는 여러 단계의 예산 배분 및 관리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서 비효율이나 낭비가 발생하게 될 소지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투입요소 관리는 일반적인 성과관리의

기준이 되므로 이런 유형의 사업에서도 적절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조형 사업에서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수원국가의 만족도이다. 원조사업은 수원국의 수요가 가장 중요한 사업 제공 근거가 되므로 수원국의 의견 수렴과 그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및 효과 발생 여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원국 의사 반영 및 만족도가 관리 기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초기 자문형 진출이 있다. 초기 자문형 진출은 특히 해외진출 초기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 유형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유형에서는 공공기관이 직접적인 사업주체가 되거나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는다. 이 유형에서는 주로 공공분야의 정책 결정이나 사업 투자 분석,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사업관리, 건설공사 관리, 장비 유지관리, 설비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자문 등이 주된 사업형태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진출국에 사업을 제안하거나 국제 입찰을 통해 용역의 형태로 사업을 수주하기도 한다. 이 유형을 통해 공공기관은 해외사업 경험 축적, 신뢰 관계 및 네트워크 구축, 교두보 확보 등의 편익을 얻는다. 이 사업 형태는 주로 개도국에 지원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사업을 통해 특정 국가의 특정 사업 영역 초기 설계 단계에 한국형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유형의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및 신뢰 구축 등이 일차적인 사업 성과물로 구현된다. 사업이 수익성을 추구하거나 직접

적인 정책 효과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 사업의 1차적 효과는 가시적이거나 직접적으로 측정되기 어렵다. 사업이 진행된 후 2차적으로는 자문을 제공한 기관의 계획이나 사업 방식이 표준화되어 한국형 사업 모델이 이식되고, 그 결과 한국의 관련 산업체의 해외 진출 기반을 형성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을 감안할 때 이 사업들은 투입관리를 중심으로 한 사업관리 기준(능력성 등)과 자문 대상 국가 혹은 기관의 만족도 등을 도입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OECD 회원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해외원조 기여도 증가, 공공기관의 국제적 위상 확보 수요의 존재, 공공기관의 수익성 개선 등 공공기관을 둘러싼 환경을 살펴볼 때 당분간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은 증가하는 추세가 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법적 유형, 해외진출 사업 유형, 해외진출 대상국의 정치적·경제적 환경 등 매우 다양하고도 복잡한 여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공공기관이 이런 복잡한 환경에 노출되어 효율적으로 사업관리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해외진출 전략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본 기고의 사업유형 분류와 관리전략은 아직 이론적 접근이 부족한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유형화해 보려는 시론적 시도이다.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관리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토론내용

박상욱(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다수의 공공기관 해외진출 사례들이 실패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해외진출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의 특성과 효과적 관리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은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산업에 최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수익성’보다는 기업의 수익성과 산업 전체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경제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에너지, 자원개발을 위한 해외진출 형태인 ‘투자형 사업’의 경우, 해외진출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산업에대한 외부효과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기관의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ODA 사업이 자문형 사업에 해당하지만 사업 완료 후 새로운 사업 기회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정광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최근 공공기관의 ODA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봄으로써 사업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향후 운용방향을 재설정하는 데 유용

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듯 4개의 ODA 원조사업 유형별로 각 사례를 제시하면서 특성을 비교하고, 각 유형 내에서 성공과 실패사례를 찾아 비교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유형별 사례를 제시한 기준과 근거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ODA 사업에는 여러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관 간 협력과 갈등요소를 분석하고, 관련 기관이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ODA 사례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아 해당 분야의 연구경향과 분석 내용을 정리하여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하세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연구팀장)

공공기관 해외진출의 시대적 특징, 해외진출의 동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 사업의 유형화, 각 유형별 진출전략 등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공공기관 해외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 제공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독자들을 위해 연구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에 대한 설명을 쉽게 수정하고, 연구 목적을 명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 LH사례 1개 사례에 주목하게 된 근거를 제시하고, 가능하다면 많은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자문형 사업에 주목하고 있으나, 다른 유형에 대한 사례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관사례 발표


손혁준(한국농어촌공사 국제협력처 차장)

- ODA 사업구성 요소 : 컨설팅 전문가 파견, 교육훈련 S/W, 기자재 지원, 한국 초청연수, 시설물 H/W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
- 사업추진 실적 : 개도국 수요에 발맞추어 2006년부터 농림축산 분야에 다양한 개발 경험 및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2014년 현재 12개국에서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 농산물 생산 및 소득증대 인프라 지원(양계, 양잠)을 통해 정부 및 농촌 마을의 자생적 역량 강화, 농가와 민간기업을 연계한 생산자-수요자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 판매망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소득을 창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전수함으로써 개도국 농촌 개발의 실질적 기회 및 차별화 추진
- 사업항목별 사례 : 소득증대사업(농업 용수로 설치, 관개용 댐 설치, 시범포 구축, 축산물 가공시설, 양어장 설치, 수확 후 처리시설, 양계시설 설치, 농산물 가공시설 구축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마을센터 건립, 식수 개발, 마을도로 포장, 다목적 창고 건축 등), 주민역량 강화(영농기술 이전, 농기계 교육, 초청연수, 교육센터 구축 등)

오병근(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처 차장)

- ODA 사업 완료현황 : 20개국에서 41개 사업 분야를 완료(수도 분야, 조사/설계/감리/운영 등)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도국

급수인구 확대(46만명, 아시아 32만명, 아프리카 14만명), 농업생산성 증대 및 식수 위생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해외사업 추진현황 : 현재 13개국 17개 사업이 시행 중이며, ODA 사업을 통해 해외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투자사업으로 확대하여 국익 창출에 기여할 계획
- 필리핀 Agent 사업(최초 운영관리 투자사업), 파키스탄 Patrind 사업(국내 최초 민관공동개발), 조지아 수력발전사업(최대규모 투자사업 착수)
- K-Water 해외사업 추진전략 : 한국의 최적기술, 자원확보, 협력활동을 통해 글로벌 물 산업을 선도할 계획, 전략국가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부의 다각적 지원 필요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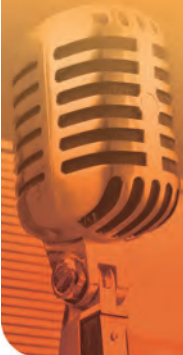
기관장 인터뷰

- 보편적 형제애에 기반을 둔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 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공공기관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 인터뷰**는 신설기관, 잘 알려지지 않은 기관 소개와 더불어 기관장의 기관 운영에 관한 비전과 철학을 들어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
보편적 형제애에
기반을 둔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

- 일 시: 2015. 10. 07
- 장 소: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실(서울 중구 소재)
- 진 행: 이원희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참 여: 김종원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정 리: 박미선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안명옥 원장 |

• 학 력

- 인일여자고등학교(1973)
- 연세대학교 의학과(1979)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 석·박사(1992)
- UCLA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박사(1998)

• 경 력

- 現, 국립중앙의료원 원장(2014)
- 現, 차의과학대학교 산부인과, 예방의학, 보건복지대학원 교수 역임(1999)
- 現, 모자보건학회 이사장(1996)
- 국회의원 여성·아동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위원장(2013)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2009)
- 제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2004)

금번 「기관장 인터뷰」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님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취임 직후, 에볼라에 대한 준비와 국립중앙의료원 위기대응단(CERT, 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을 발족하는 등의 공공보건 의 료체계 강화를 통해 메르스가 발생하였을 때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았습니다. 특히, 이번 메르 스와의 전쟁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강안보(Health Security)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나라 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공적 자부심을 바탕으로 소통·협동·협업하여 새로운 공공의료를 창조하겠다는 안명옥 식의 '신개념 공공의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많이 알려졌는데요. 국립중앙의료원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료원 설립근거법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의료원은 공공의료를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 전체의 건강증진 및 국가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서 같은 법 제5조에 의료원이 수행해야 할 사업들을 명시해 놓았는데, 이 중 제4항이 ‘전염병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의료원이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조직도를 보면 기능과 사업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게 국립중앙병원·공공보건의료본부·공공의학연구소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립중앙병원은 국민 전체 건강증진을 위해 일반병원과 동일하게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자들 중 취약계층의 비중이 상



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공보건의료본부는 또 다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나뉘는데,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국립대학병원, 적십자 병원(5개), 지방의료원(33개), 원자력 의학원, 경찰병원, 수도통합병원, 보훈병원 등의 211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권역별로 분포되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535개 응급의료센터의 중앙거점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원은 211개의 공공보건의료기관과 535개의 응급의료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학연구소가 있는데, 이곳은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R&D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

에는 감염병연구센터, 만성질환연구센터, 임상시험센터의 3개 센터가 있었으나, 제가 취임하면서 통일보건의료센터, 응급의료연구센터, 의약품유해반응관리센터, 여성건강센터 혁신연구센터를 신설함으로써 확대·개편되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메르스 1호 환자의 진료를 시작으로 메르스 환자 진료와 원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작년 12월 22일 취임했을 당시에는 에볼라에 대한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취임하자마자 에볼라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때 당시, 의료진에게 고강도의 개인보호장구 착용·탈의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불과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던 에볼라 매뉴얼을 보완하여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위기대응단(CERT, 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을 본받아 국립중앙의료원 전 직원과 10만 동대문 상인을 대상으로 응급구조를 위한 훈련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올해 4월 발대식을 거쳐서 한국의 '위기대응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위기대응단 조직이 그대로 '메르스 비상대책본부'가 되었습니다. 다만, 의료원이 메르스 중앙거점 병원이었기 때문에 위기대응단 조직에 '중앙본부'만을 추가했습니다.

“
에볼라에 대한 만반의 준비,
위기대응단 발족으로 인해
메르스 위기 속에서도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이렇다 보니 메르스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다 준비해놓고 있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20여명이 넘는 환자와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환자 30명, 의심환자 35명의 총 65명 환자를 돌보면서도 의료진 감염이나 병원 내 감염 없이 무사히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5월 20일 메르스 환자 첫 발생일부터 7월 27일 비공식적인 메르스 종식일까지 그 70일간의 기록을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그 기록을 바탕으로 「메르스 [MERS]감염병관리기관 실무대응지침」을 발간하였습니다. 현재는 2.2버전까지 나온 상



국립중앙의료원 정문 앞에 임시로 마련된 메르스 의심환자 검사 진료 대기실 모습

태이며,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모든 공공기관에 무료로 공개하였습니다. 책자뿐만 아니라 개인보호장구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착용방법을 상세히 담은 영상자료도 직접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메르스 백서」를 작업 중에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에 대한 원장님의 비전과 경영철학이 궁금합니다. 특히, 원장님은 ‘신개념 공공의료’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제 일생의 소원이 공무원 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삶도 공적인 일이고, 보람이 있었지만 의료원은 현장의 느낌이 더 강한 곳입니다. 비록 이 기관이 2010년 법인화되면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공선을 위해 정의로운 일을 하는 곳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미래지향적이며 혁신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의료원에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취임 100일에 ‘1000일을 향한 100일의 약속’이라고 하여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장은 3년 임기이기 때문에 보통 1,100일 정도의 근무일수를 갖습니다. 그래서 취임 후 100일 정도에 앞으로 내가 1,000일 동안 무엇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공적 자부심을 바탕으로 소통·협동·협업
 하여 공공의료를 새롭게 창조하자는
 안명옥식의 신개념 공공의료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건강한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보편적 형제애(Universal Fraternity)에 기반을 둔 ‘사랑’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와 함께 ‘신개념 공공의료’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용어 자체는 전(前) 원장님이 2012년에 중장기발전전략에서 사용한 용어인데, 저 또한 공공의료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데다가 누군가는 전임 기관장의 뜻도 계승해야 하므로 그 용어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다만, ‘신개념’이라는 용어 안에 제가 실천하고자 하는 개념들을 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개념 공공의료는 ‘5C’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부심(Confidence), 소통(Communication), 협동(Cooperation), 협업(Collaboration), 창조성(Creativity)으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공적 자부심을 바탕으로 소통·협동·협업하여 공공의료를 새롭게 창조하자는 것이 제가 정의한 신개념 공공의료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서 5개 영역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 중 하나는 경제적·연령적·지역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inclusive) 개념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시스템의 기본 요소이지만 민간영역이 잘 수행하지 않는 호스피스 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9월에 의료원 내에서 정경이 가장 뛰어난 곳인 별관 2층에 호스피스 병동을 신규 오픈하였습니다.

또한, 메르스 같은 응급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 공공보건의료 대표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 보건의료분야 ODA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1958년 스칸디나비아 3국(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의 원조에 의해서 개원한 만큼, 우리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원조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 정신을 기리는 일환으로 개원 당시의 의사 숙소 하나를 복원하여 스칸디나비아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기념관이지만 주한 스칸디나비아 대사뿐만 아니라 주 스칸디나비아 한국 대사도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기념관에 그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의료진의 이름을 다 적어 놓았더니, 방문객 중 한 분이 자기 할머니 이름이 있다고 좋아



스칸디나비아 기념관 내부

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보건영역과 군진(국방)의 학 영역입니다. 대부분이 취약계층일 북한인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영역에서 많은 준비 작업을 해놓아야 합니다. 함경북도 같은 오지에서 환자를 진료할 민간의 사설 병원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군인이 약 50만명, 직업군인까지 합하면 모두 60만명 정도가 되는데, 군진의학 영역도 현재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공공성과 수익성의 관계를 정립하기가 매우 어려운 기관으로 보입니다. 재무 건전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요.

의료원은 어르신들, 다문화가정, 의료급여 대상자, 행려환자, 노숙자, 신원불명자 등에 대한 미충족 필수 의료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해도 발생하는 적자가 1년에 3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신원불

명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서 급여도 나오지 않습니다. 양극화 등의 심화로 이와 관련한 적자도 점점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는 수입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타개책의 일환으로 비급여 진료를 고려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과잉진료가 아닌 전국 평균 수준 정도의 비급여 진료를 시행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계산해 보았더니 258억원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이면 미충족 필수 의료로 인해 발생하는 ‘착한 적자’의 대부분을 메꿀 수 있으나, 현재는 의료원 특성상 비급여 진료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특성으로 인한 구조적 적자 외에도 의료원 이전 계획에 따라 만성질환자가 이탈하면서 수입구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메르스가 더해지면서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실제로 메르스 환자 진료를 위해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 40여일간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를 중지하여 수입이 없다 보니 직원 월급을 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8월과 9월은 국가가 지급한 일부의 손실 보전금으로 겨우 고비를 넘긴 상황입니다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병원들에 2,000억원을 배정해주었습니다만 저희 손실분인 237억원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

이 더욱 커지는 것을 막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목숨을 담보로 헌신한 만큼 손실분에 대한 전액 보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R&D 기능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료원의 R&D 기능은 공공의학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연구소의 연구영역을 다원화하는 작업을 통해 R&D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IT나 BT 같은 영역에만 R&D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보았듯이 의료분야 또한 R&D가 절실하게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번에 186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는데, R&D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양약품과 ‘감염질환 치료 신약개발을 위한 비임상 및 임상시험’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메르스 및 감염질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메르스 환자 한 분이 중국에서 치료 받은 것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중국을 그 환자를 치료하는 데 15억원이 들었음에도 그 비용을 한국에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심을 쓰듯 얘기했습니다만, 그 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얻은 균주로 백신 연구를 시작하는 등 메르스와 관련된 모든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균을 저장할 냉동고가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

황입니다. 이번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냉동고를 구입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일반 병원과 달리 의료 보건영역의 최전방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곳입니다. UNDP가 언급한 인간안보(Human security) 7개 영역 중에 건강안보(Health security)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군인에게 돈을 벌어서 국방의무를 하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건강안보 영역에도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인간의 건강안보(Health security)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영역을 설명하는 용어로 'CBREN'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학(Chemical), 생물학(Biological), 방사선학(Radiological), 핵(Nuclear), 비행기 테러와 같은 폭발(Explosive)의 영역을 말하는데, 체르노빌 사태만 보더라도 이러한 5개 영역에서 사고가 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개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투자를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 당시, CBREN 기능이 집약되어 있는 미국의 중앙공공보건의료기관에 12.5조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신청한 예산은 7조달러였으나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산이 증액되었고, 최종적으로 12.5조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의료원의 경우에는 한 해 200억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운영상의 특징으로도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R&D 투자는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는 포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 R&D 투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안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총액예산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이번 국회에서도 밝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총액예산제는 의료원 총운영비를 총액예산으로 배정하여 그 예산 안에서 의료원을 자유롭게 운영하되, 의료원의 수입활동으로 인한 수익은 공공의학 연구소나 의료장비 구입 등의 투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료원 투자에 대한 선순환적 구조 없이는 국립중앙의료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원이 1958년 당시, 아시아 최고·최대 규모로 건립되어 모든 국민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것처럼 지금도 최고의 시설로, 최고의 의료진에 의한 적정진료로, 국민이 믿고 올 수 있는 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존재 이유와 특성을 인정해 주

이야 합니다.

의료영역도 관련기관 간의 공동연구,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등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정부 3.0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의료원은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공공보건의료기관 210개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경찰병원은 안행부, 원자력의학원은 미래창조부, 보훈병원은 국가보훈처 등으로 주무부처가 다르다 보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Public Health Network)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의 중심으로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공공영역 간의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공공민간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을 통해 민간영역의 우수 의료기관 및 의료진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일약약품과 ‘감염질환 치료 신약개발을 위한 비임상 및 임상시험’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5개의 대학병원(서울대·연세대·고려대·카톨릭대·이대)과 연구·교육·진료(임상)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연구·교육·진료(임상)’이라 함은 의료에 있어서는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교류를 통해 진료·연구 역량뿐만 아니라 행정 역량까지도 강화하

고, 자발적 혁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아산병원 및 삼성병원과도 연구·교육·진료(임상)에 대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아산병원과는 이미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삼성병원과도 곧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의 경우 좋은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특성상 민간영역보다는 보수수준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료진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의료원의 보수수준은 민간병원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자부심이 높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우리 의료진들이 쪽잠을 자고, 집안에서 쫓겨나면서까지도 헌신적으로 진료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사진도 붙여놓았으며,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사투를 벌인 우리 의료진이 바로 300인의 전사라고 하였습니다.

공공선을 지향하며 공적 자부심이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분들을 영입해서 마음껏 진료하고 연구하게 하려면 결국은 투자밖에 없습니다. 계



속 같은 얘기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의료원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 저희는 의료진의 총정원보다 현원 수가 적은데, 의료원 수입을 통해서 인건비를 부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도입되는 임금피크제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의료원의 정년은 현재 58세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전문직인 의사들은 정년이 없습니다. 대학병원만 해도 정년이 65세인데다가 정년퇴직하면 다른 곳에서 모셔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은 정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다가 의료원을 퇴직한 분을 다른 곳에서 모셔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대학병원으로의 의료진 유출이 있는 편입니다. 이번에도 의사 한 분이 대학병원으로 옮겨 갔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국가 정책에 순응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공공기관 기관장의 한 분으로서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된 제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 하고 싶은 점은 다양성을 가진 여러 공공기관을 '기타공공기관'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몽둥그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가스기술공사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가능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기관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교하면서도 세밀한 개별화 작업을 통해서 맞춤형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업에는 국가의 노력뿐만 아니라 개별 공공기관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정책, 경영평가, 재량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천편일률적인 정책이나 기준을 배제하고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스스로의 특성을 반영한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세우면, 국가는 그 계획을 정책에 녹여내는 형태로 'bottom-up'과 'top-down' 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방향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공공기관 장의 임기가 3년이다 보니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관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는 기관장이 무책임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들 역시 3년 있으면 퇴임할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관장이 정책을 시행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랑’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모든 사인은 제 이름 안명옥의 약어인 ‘AMO’인데, 이 단어는 종교적인 의미가 가미되어 있지만 라틴어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에는 일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사랑 등 많은 종류가 있지만, 이번에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면서 동고동락한 직원들의 생명에 대한 애정과 헌신, 공동선·공공선에 대한 열정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공동선·공공선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은 우리 의료원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공공기관 또한 모두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신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기관장들이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받은 감동을 더 큰 감동으로 만들기 위해 직원들을 더욱 격려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을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의료원에 꿈틀거리고 있는 생명에 대한 열정, 공공선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라는 이 가치와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경쟁의 논리가 아닌 인간의 가치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공공기관을 따뜻한 눈, 사랑의 눈으로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슈
포커스



국립중앙의료원
(National Medical Center)

주무 기관	보건복지부	기관 유형	기타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	안명옥 ('14.12.22~'17.12.21)
소재지 (대표 전화/ 홈페이지)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5 (02-2260-7114 / www.nmc.or.kr)			설립 연도	2010년 04월
설립 근거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설립 목적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 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				
주요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8년 11월 스칸디나비아 3국 지원으로 개원 • 1968년 10월 정부에서 운영권 인수, 국립의료원특별회계 설치 • 2000년 01월 책임운영기관 지정 • 2009년 04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 2010년 04월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 출범 				
주요 기능 및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한의학 진료 및 연구 • 뇌·심혈관질환, 감염질환 등 공공의학 연구 • 전공의 수련 및 의료인력 훈련 • 전염병 및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국가보건의료 정책사업 수행 • 국가 주요행사, 대형 재난 등 의료지원 				

“
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 일 시: 2015. 11. 04
- 장 소: 문화예술위원회 서울 사무소(서울 종로구 소재)
- 진 행: 이원희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참 여: 나진희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정 리: 박미선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박명진 위원장 |

• 학 력

- 경기여고(1965)
- 서울대 불문과 학사(1969)
- 프랑스 Nice 대학 현대문학 석사(1973)
- 프랑스 Sorbonne Nouvelle 대학 영상 커뮤니케이션 박사(1978)

• 경 력

- 現,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2015)
- 서울대학교 부총장(2010)
- 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2008)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위원회·문화현장 제정위원회 위원(2004)
- 제30대 한국언론학회 회장(2003)
- 문화비전 2000·새로운 예술의 해 추진위원회(1997)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1980)

이번 「기관장 인터뷰」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명진 위원장님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기초예술분야를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훌륭한 예술작품을 통해서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방식을 새롭게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단순한 창작기금 지원 기능에서 벗어나 창작자와 민간재원을 연계해주는 민간재원 유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예술시장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말은 관련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느낌이 강합니다. 더군다나 ‘위원회’가 붙어서 ‘공사’나 ‘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느낌보다는 ‘합의제 기구’ 같은 인상을 주는데요. 먼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능, 역할 등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973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운영되어 오다가 참여정부 시절 현장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문화예술정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지금의 위원회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문화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지원은 하되 창작에는 개입하지 않는 ‘Arm’s Length’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의 결과가 일반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노력과 활동은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예술가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410만명의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사업’, 그리고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앙과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제교류



나 공공미술과 같은 사업들을 통해서 문화예술진흥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초문화예술은 초기에 정부의 지원이 마중물 비슷하게 투자되어야 발전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국고에서 기초문화예술분야를 지원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지원 규모 또한 매우 큼니다. 영국은 국민 6천만명이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모바일을 이용하는 만큼의 예산을 기초예술분야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모바일 기본통화요금에 약 1,710원이라고 하니 거기에 영국 국민 6천만명을 곱하고, 1년에 해당하는 52주까지 곱해서 총예산을 계산해보면 1년에 약 5조 3천억원에 이릅니다.

영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처럼 민간의 문화예술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NEA(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and Humanities)’를 통해 기초문화예술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영국만큼

지원규모가 크지 않지만 그 권위는 대단합니다. 미국에서 NEA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해당 예술작품이 ‘품질보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은행이나 민간 기구로부터 NEA 지원금의 7~9배에 해당하는 투자나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초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예술가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훌륭한 예술 작품을 통해서 국민들의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면, 개인의 건강과 행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미국 NEA 50주년 축하 행사에서 오바마 대통령 부인이 예술만큼 사람의 정신적인 유연성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술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저도 그 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예술의 자생력을 높이고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이 주는 창조적 기쁨을 더욱 만끽하고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기조 중 하나가 문화융성인데다가 ‘Creative Link’를 중요시 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에 대한 기대도 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떤 비전과 경영철학을 통해 위원회를 운영하실 생각인지요.

“
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까지의 지원방식을 벗어나
관객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방식으로의
개선하고자 합니다
”

저는 기초예술부터 대중문화까지 문화 예술 전반을 망라하는 학문인 문화연구(Cultural Studies)를 전공했는데, 그 분야에서는 지금 한 사회 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수용자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는 문화예술을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시각으로 바라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우리의 기초문화 예술분야를 보면, 관객이나 독자 등 수용자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가 스스로 기초문화예술은 고급예술로서, 그 특유의 순수성과 고유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상업성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한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객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보니 기초예술이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그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과 관객 개발을 통한 수요 창출을 목표로 지원방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들의 창작능력과 관객의 향유수준을 함께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생적인 창작여건 조성

및 예술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통 예술에 시장을 붙이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저는 오히려 왜 예술에 시장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느냐는 입장입니다. 서양은 순수예술 시장의 규모가 크고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벨기에 화가인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와 같이 ‘쉽지 않은’ 예술가의 작품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서 많은 반향을 일으킨 것을 볼 때, 우리나라 예술 시장도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저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에 관객을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원의 경우에는 창작자에게 지원금 지원은 물론 본인이 원한다면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또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회가 기존처럼 창작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업별 크라우드 펀딩과 매칭 펀드를 활용하여 창작자와 민간재원을 연계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간재원 유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민간의 문화예술 지원 또한 함께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원방식은 창작자에게 관객과 소통하려는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지원방식에 대해서 관객을 위해서 쉬운 작품만 만들어야 하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쉬운 작품과 어려운 작품이란 것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작품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작가들이 무엇을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몰랐거나 독자나 관객에게 작품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술작품을 만드는 작가들 또한 본인의 작품에 대중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고 하면, 스스로 작품을 설명하거나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등 관객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방식의 개선과 함께 해외시장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무처장 직속으로 국제교류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국가대표 K-Art 확산을 위해 분야별 대표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시각예술분야의 노벨상이라 할 수 있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건축전)을 수상했고, 올해에는 은사자상(미술전)을 잇따라 수상하였는데,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도 기초예술분야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역량들을 잘 조직화하고, 좋은 작품들을 개발하여 대한민국의 예술성을

해외시장에 널리 알리는 등 ‘한류 3.0’을 견인하는 기초문화예술의 국제진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라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라톤 선수 몇 명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이 마라톤을 즐기게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이처럼 문화예술지원 목표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향유의 범위를 넓히려고 하면 역시 재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정부는 문화융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문예진흥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문예진흥기금은 1973년부터 2014년까지 예술창작지원, 국민문화복지, 국제교류, 지역 문화활성화 등을 위해 1조 8,345억원을 지원한 유일한 기초예술진흥 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107개소의 문예회관을 건립하는데 4,979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전국의 문화예술진흥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 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영화, 출판, 만화 등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1,843억원을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버팀목으로 자리 잡은 기금입니다. 송강호, 김윤석, 설경구, 황정민, 조승우, 류승룡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많은 영화배우들이 대학로 소극장에서 연기를 시작했는데, 문예진흥기금이 바로 내일의 송강호, 황정민을 키우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

문예진흥기금은
대한민국 문화예술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버팀목으로, 이러한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보다 근본적인
재원 조성 대책이 필요합니다

”

그런데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관람료의 일부를 모금하여 문예진흥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2004년에 관람료를 통한 기금 모금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원래 기금의 운영 원칙은 안정적인 적립금을 바탕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자수입을 활용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금 조성 방식이 사라진 이후 대체할 수 있는 적립금 보전방안이 있었어야 했는데 추가적인 기금 전입이 없는 상태에서 적립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하다 보니 기금 고갈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4년 당시 약 5,000억원 수준이었던 기금 적립금 잔고가 점차 줄어들어 올해 말에는 918억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기금 적립이 없는 경우에는 2016년 말 653억원, 2017년 말 183억원을 거쳐 2018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에 기금 적립을 위해 예산에서 1,000억원을 배정해 주었으나, 그 금액에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사업예산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기금

적립에 도움이 되는 액수는 150억원 정도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지만 이렇게 해서는 인력운용상의 부담 등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기금 확충의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금 마련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며 안정적인 자원 조성 대책이 필요합니다.

위원회가 나주로 이전하면서 그간 서울에 치중되었던 문화예술이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지역문화라는 것은 결국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활성화시켜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도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의 광역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운영 중(금년 내 전북지역 설립 예정)이며, 시군구나 읍면동과 같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지역문화재단도 56개이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문화예술 지원과 진흥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중복하여 편성하는 것을 피하고, 공동사업을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지역문화재단의 사업을 중앙 차원에서 조율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영국에서도 10년 전에 지자체에 맡겨두었던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권

한을 다시 중앙으로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도 중부권(대전), 영남권(대구), 호남권(나주)에 총 3명의 지역협력관을 파견하여 지역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협력관은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역과 우리 위원회를 연결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활성화사업기금을 통해 중앙 차원의 큰 틀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조율하고, 지역문화재단과의 협력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기금이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각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배분될 것 같습니다. 각 지역문화재단은 기금을 지자체로 줄 경우에는 해당 재원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기재부가 계속해서 제시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기금이 지역특별회계를 통해서 배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원회로서는 지역문화재단이 제기하는 문제도 우려스럽지만, 기금 배분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도 기존처럼 지역과의 의견 조율이나 협력체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주로의 기관 이전은 또 다른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에는 위원회 업무 특성상 예술 현장과 소통이 잘 되어야 하는 곳인데 예술인의 60%가 활동하는 서울을 떠

난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전 후 함평·장흥·고흥 등의 주변지역을 방문해보니 나주 이전을 통해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문예진흥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지역밀착형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도 보았습니다. 특히,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전·확산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광주가 아시아 문화교류의 거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쪽은 위원장님 전공과 연관이 깊기도 하고, 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요사업과는 별개로 공공기관 장으로서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정부정책에 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임금피크제와 NCS입니다. 특히 문화예술위원회는 스펙에 연연하지 말고, 직무능력에 따라 채용하는 NCS가 매우 적합한 기관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임금피크제는 노조의 협력을 통해서 9월에 도입한 상태입니다. 저희 노조가 민노총 소속이어서 강성임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납득해 주어서 당초 목표보다 더 빨리 도입할 수 있었



습니다. 물론 논의 초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는 중이며, 더 나아가 퇴직 후 인생설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NCS와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공사와 같이 이미 사업의 틀이 정해져 있고 전공분야가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기관과 달리 위원회에 NCS 채용 모델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기관의 경우는 예술행정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문화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필요하지만 공공기관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업무처리 능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문화예술분야가 모두 10개 분야인데, 그 중 하나의 분야를 전공했다고 해서 위원회에 적합한 직무능력을 가졌다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파

악함은 물론, 자칫 일부 학교 또는 학과에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분류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직무를 현실에 맞게 좀 더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소에 문화예술분야 전반에 걸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필기·면접 전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올해 11월에 NCS를 도입하고, 내년도 채용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력과 스펙 위주의 획일화된 채용을 최소화하고, 단순한 직무 경험자나 전공자가 아닌 문화예술분야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인재를 확보하여 문화융성시대에 보다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공공기관 기관장의 한 분으로서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된 제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기관의 구조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각 분야의 대표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위원회 구조라는 점과 한편으로는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정책방향과 호흡을 같이해야 한다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법률에서 각 분야의 대표자인 위원, 주무부처,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을 필요

“
 우리 위원회처럼 독특한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기관에 대한
 하나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었으면 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와 같은 독특한 구조를 가진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시장실패가 불가피한 영역에서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입니다. 우리 위원회 또한 그러한데,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이 9.6% 증가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초예술지원을 위한 예산인 문예기금은 10%가량 줄어든 상황입니다.

기초예술이 튼실하게 제 역할을 해주어야 여기에서 파생되는 콘텐츠, 대중문화 등이 발전해갈 수 있는데 기초문화예술지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중문화 산업, 한류콘텐츠 관련 예산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기초예술예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초예술이 튼튼하게 받쳐주고 제대로

역할을 해주어야 대중문화 산업과 한류콘텐츠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도 가능합니다. 기초예술분야의 발전을 수반하지 않는 대중문화의 발전은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주무 기관	문화체육 관광부	기관 유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관장 (임기)	박명진 (*15.06.09~ *18.06.08)
소재지 (대표 전화/ 홈페이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061-900-2200 / www.arko.or.kr)			설립 연도	1973년 10월
설립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				
설립 목적	훌륭한 예술이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				
주요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2년 08월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 1973년 10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개원 • 2005년 08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인설립 • 2014년 04월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지방이전 				
주요 기능 및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지원 •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 교류지원 • 문화예술인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 				



IV

현장의 소리

- 내일을 위한 인재 양성의 지침서, NCS
양기훈 한국산업인력공단 NCS센터 원장
- 문화융성의 결실이 풍요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에
기여할 것을 확신하면서
이용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 국민의 행복한 노후준비, 국민연금공단이 함께합니다
김무용 국민연금공단 업무이사



* **현장의 소리**는 각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실상과 문제점,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칼럼입니다. 각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현장의 소리는 공공기관 임직원분들의 기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고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kamin@kipf.re.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내일을 위한 인재 양성의 지침서, NCS



양기훈
한국산업인력공단 NCS센터 원장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의 의미와 역할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 갈 힘은 오직 사람에게 있다. 모든 개개인이 자신의 꿈과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제 능력을 펼칠 때, 내일의 가능성이 열릴 수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일을 만들기 위하여 국정과제 ‘75.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일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나침반’, ‘인재 양성 지침서’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NCS를 통하여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자격제도에도 일관화된 기준이 마련되어 현장이 원하는 인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양성하는 토양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에 NCS 개발 및 활용·확산을 전담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부설기관으로 NCS센터를 출범시켰다

(15.5.18). NCS센터에서는 산업현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NCS의 개발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NCS 기업 활용 컨설팅, 공공기관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등 다양한 NCS 활용·확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NCS 활용·확산의 핵심과 추진현황

NCS 활용·확산의 핵심은 민간의 자발적인 활용이다. 호주, 영국 등 표준이 잘 정착된 해외의 사례를 보면, 산업계 주도로 표준을 만들고 정부는 개발한 표준을 승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표준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민간이 자신들을 위한 표준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기존 체계가 급격하게 해체되고 정부 주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합의를 주도할 수 있는 산업계의 대표기구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표준은 우리 모두


가 동의하고 인정할 때에만 표준일 수 있으므로 산업계의 합의는 필수적이다. 전체적인 합의가 어렵다면 그 성원인 산업체 하나하나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그 방법은 민간이 스스로 표준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민간이 NCS 개발 및 활용·확산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확대하는 한편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도 8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NCS 기업 활용 컨설팅 사업이 그 일례다. ISC(Industry Sector Councils) 등 산업계가 직접 NCS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컨설팅 내용은 기업의 요구에 따라 신규직원 선발이 될 수도 있고 재직자 교육·훈련이 될 수도 있으며 승진, 배치, 임금체계 등 HR 전 분야를 망라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접근으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컨설팅 사업이 있다. 이는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NCS를 활용함으로써 민간에 확산시킬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인사관리의 첫 관문인 채용에서부터 NCS를 활용하여 해당 기관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NCS 도입 효과를 전파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 채용을 통해 NCS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제고하여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NCS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노력

앞서 이야기한 NCS 사례는 NCS 활용·확산의 일부에 불과하다. NCS의 활용 분야와 범위는 다양하다. 모든 일터에서, 모든 인재양성소에서 NCS를 활용할 수 있다. 4년제 대학이나 중·고등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일에 꼭 필요한 능력을 길러 일터로 나가고 지속적으로 경력을 개발하기 위한 로드맵을 그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개인은 NCS라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직업세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쓰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NCS의 활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뜻대로 NCS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NCS가 사회 전반에 통용되며 ‘능력’의 정확한 신호로 기능하게 된다면, 능력중심 사회로의 발전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문화융성의 결실이 풍요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에 기여할 것을 확신하면서

이용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보이지 않는 문화의 힘

어느 일간지 기고문의 일부를 소개한다.

한국의 모 대기업과 프랑스의 대기업 간 합작 사업이 거의 성사단계까지 진척되었다. 구두 합의를 마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프랑스 기업 대표 안주인의 저녁 초대 행운까지 얻게 되었다고 한다. 안주인은 프랑스 요리가 생소한 한국인들의 입맛을 고려해서 수제스테이크와 메인 요리를 직접 만드는 등 만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손님들을 맞았다. 드디어 저녁, 메인 요리 스테이크가 나오자 한국인 사장은 안주인의 수제소스를 맛보기도 전에 시중에 시판되는 'A1' 소스를 달라고 했다. 그러자 함께 한 전무며, 부장이며 줄줄이 "저도요!"를 외쳤다. 그리고 이튿날, 이른 아침부터 한국인들이 묵고 있는 호텔로 한통의 전화벨이 울린다. "합작 계약은 모두 없었던 걸로 한다". 프랑스 직원의 전화였다. 왜 그랬을까. 유럽에서는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직접 만든 소스를 만들어 쓴다. 고급 와

인과 좋은 버섯, 치즈 등 양념으로 거의 두 시간 반 정도 적당한 불에서 정성들여 만든다. 바로 소스가 요리의 하이라이트인 것이다. 소스를 음미하고 좋은 평가와 함께 환대에 대한 감사를 기대한 프랑스 대표 안주인을 면전에 두고 정성스레 만든 소스는 맛도 보지 않고 미국식 저렴 소스의 대명사인 'A1'을 찾았으니 합작파트너를 결정할 순간의 프랑스인의 마음이 어땠을지 헤아리기란 어렵지 않은 일이다(신성대, 데일리안, 2013년 6월 15일).

우리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비즈니스의 성공을 바라기가 요원한 시대에 살고 있다. 문화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지만 앞서 소개한 에피소드에서처럼 자연스럽게 교양과 품격으로 체화되고 경계 없는 상상력으로 내재화될 때 우리를 성장을 넘어 성숙과 행복의 경지로 이끄는 힘이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지면 광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국정2기 문화융성 강조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광복 70주년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이자 대안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두 날개를 완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다시금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많은 지식인들이 대한민국은 현재 ‘추격의 시대’가 아닌 ‘추월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상통한다. 지금까지의 지식추격, 산업추격, 행복추격의 성공해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지금, 우리만의 성공 방정식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에 다른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973년 설립된 이래로 지난 42년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가의 창작지원과 국민의 문화향유지

원을 위해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초로 문화융성이 국정기조로 설정되면서 문화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문화융성위원회, 문체부와 함께 ‘문화가 있는 날’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예술창작 생태계 조성,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세계건축·미술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베니스비엔날레에서 2014년 건축전 황금사자상, 2015 미술전 은사자상 수상이라는 국내 최초의 역사를 2년 연속 다시 쓰는 쾌거를 거둔 바 있다.

국정2기 문화융성 국정기조에 발맞추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예술가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확고히 하고 국민체감형 문화예술서비스를 적극 발굴·공급하



문화예술후원 우수기업 인증사업(사진 제공: (주)효성)



2015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해외초청작-셰익스피어 소네트

는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제5대 박명진 위원장 취임 이후, 이제까지의 공급 중심의 창작지원, 문화향유지원 기능에서 관객 개발을 통해 기초예술 수요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자생적인 예술창작 여건 조성과 시장 확대를 도모하는 역할로 대대적인 전환을 꾀하고 있다.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 (백범 김구)

21세기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한다. 신규산업 육성, 수출시장 개척 등의 경제부문뿐만 아니라 선진국 클럽에서의 발언권 확대, ODA 등 외교부문, 다문화 사회 도래 등 사회통합 부문에 이르기까지 ‘문화’는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국민행복과 국력신장의 필수조건인 것이다. 2015년이 국정2기 문화융성의 옷매무새를 다시 하는 문화예술지원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도약의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행복한 노후준비, 국민연금공단이 함께합니다



김 무 용
국민연금공단 업무이사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한 인식과 지원 부족

우리 사회는 2017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 국민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60년에는 40.1%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 기간은 길어지고 있는 반면,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7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의 대량 은퇴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노후준비가 부족한 은퇴세대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국민의 대다수는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노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인 빈곤·질병 등 문제 발생 해

소에 드는 복지재정지출 및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미래 노인세대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 「노후준비지원법」으로 고령화 사회에 선제 대응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는 고령화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정과제 47호-③에 ‘전국 단위 노후설계 교육 실시’를 채택, 노후준비 강화를 국가의 역점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올해 6월 「노후준비지원법」이 제정되어 금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후준비지원법」은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 방안을 정부 주도하에 장기적으로 모색하고,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고령화 사회를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는 이전의 ‘사후적’ 복지 패러다임에서

‘예방적’ 복지패러다임의 실현을 예고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 컨트롤타워 역할

금년 12월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가 설치되고, 전국 107개 공단 지사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로 지정되어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중앙센터에서는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관리, 노후준비서비스 조사·연구·교육, 홍보사업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담당하게 되며, 지역센터는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노후준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정부에서는 타 공공기관도 지역센터로 추가 지정하도록 하여 모든 국민이 가까운 곳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부문 최초 250만명에게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공단은 2008년부터 공공부문 최초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약 250만 명(상당 50만명, 교육 200만명)의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았고, 공단이 운영하는 노후준비 전문사이트 ‘내연금’ (<http://csa.nps.or.kr>)에서는 연간 300만명이 노후준비 관련 정보를 이용한다. 또

한 서비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 양성에 힘써 직원의 70%(3,673명)가 1개 이상의 노후준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 CSA(Consultant on Successful Aging, 노후준비종합상담사), AFPK(한국재무설계사),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사회복지사


고품질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만큼 공단은 이러한 서비스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고령사회 대응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관련 정부부처, 공공·민간기관 등 영역별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노후준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진단지표를 생애주기별로 개발하는 한편, 표준화되고 실효성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국민들이 고품질의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당장 올해에는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공·사연금 연계포털을 구축하여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내연금’ 사이트)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사적연금(퇴직·개인연금)을 한 화면에서 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사회적 관계 등의 정보와 각종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국민이 노후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 노후준비지원법 주요 내용 〉

- ◇ (체계) 23조 및 부칙 2조로 구성
- ◇ (목적)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 ◇ (정의)
 - ▶ 노후준비 :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
 - ▶ 노후준비서비스 :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해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
- ◇ (국가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제5조)
 - ▶ 국가는 노후준비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노후준비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 ◇ (중앙·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 제9조·제10조·부칙 제2조)
 - ▶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
 - ▶ 공단 지사 및 공공기관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
-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제15조·제16조)
 - ▶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정보 등을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 구축

있는 보편적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공공·민간기관과 적극 협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 기대

현 시대상황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공단의 기본역할과 함께 국민의 노후준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단에 요구하고 있다. 오는 12월 23일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공단 임직원들은 노후준비서비스가 국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손쉽게 받을 수



V

정책동향

- '15~'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유사 및 중복 기능의 공공기관 통합 및 이관

* 정책동향은 공공기관과 관련한 정책변화 혹은 새로운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편집자 주)

'15~'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15~'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¹⁾이 마련됨에 따라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되었음
- (총 부채비율) 제출된 '15~'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의 총 부채비율²⁾은 지난해 수립한 '14~'18년 계획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임
 - '14년 계획 대비 '15년 계획의 주요 변동사항은 '14년과 '15년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비핵심 자산 매각 등 기관별 자구 노력에 의해 '18년 기준 부채비율은 4%p 하락하고, 부채는 4.6조원 감소함
 - 당초 '17년 달성 계획이었던 총 부채비율 200% 이내 목표를 금년 말 달성할 예정임
 - '14년 부채비율 감소 추세가 유지됨으로써 향후 5년간 총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년에는 160%대를 전망함

〈표 1〉 '14년 계획 대비 '15년 계획 비교

(단위: 조원,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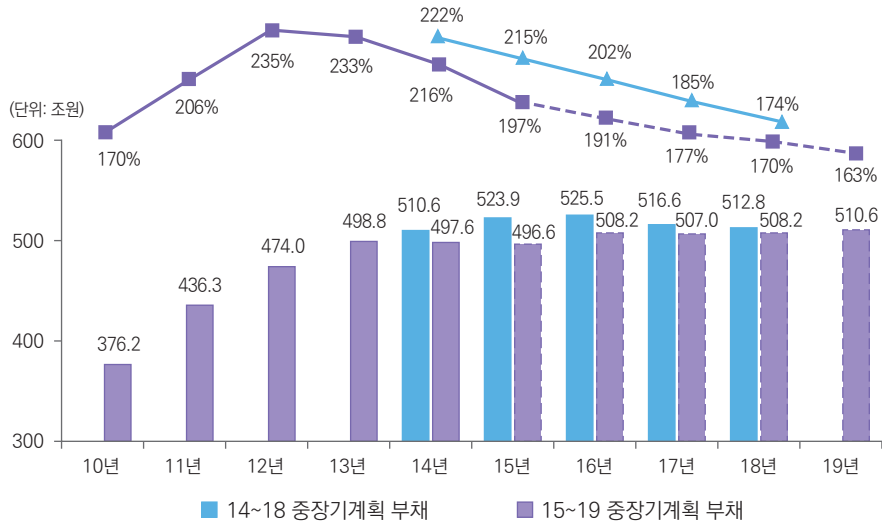
		'14(실적)	'15	'16	'17	'18	'19
'14~'18년 중장기(A)	부채	510.6	523.9	525.5	516.6	512.8	-
	부채비율	222	215	202	185	174	-
'15~'19년 중장기(B)	부채	(497.6 ¹⁾)	496.6	508.2	507.0	508.2	510.6
	부채비율	(216)	197	191	177	170	163
차이(B-A)	부채	(Δ13.0)	Δ27.3	Δ17.3	Δ9.6	Δ4.6	-
	부채비율	(Δ6)	Δ18	Δ11	Δ8	Δ4	-

주: 1) 전체 공공기관 부채('14년 520.5조원)의 96% 차지
자료: 기획재정부

- 1)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가재정 부담으로의 전이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공기업, 준정부 기관(39개 기관)은 '12년부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해옴
- 2)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판단기준으로는 부채 절대규모가 아닌 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부채비율(부채/자본)이 보다 적절함

- 부채비율이 높은 18개 중점관리기관들도 '14년 부채비율이 322%에서 '19년 부채비율 226%로 개선될 것으로 보임

[그림 1] '14년 계획 대비 '15년 계획 비교



- (총부채) 총 부채규모와 금융부채가 현행 수준(500조원 초반 대)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될 계획임

- 전체 금융부채의 경우, 영업 개선과 비핵심 자산 매각에 의해 '1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총자산에서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임
 - 에너지 분야는 신규 원전건설 등의 영향으로 금융부채가 '15년 109.9조원에서 '19년 121.6조원으로 증가하나, 총자산 대비 비율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표 2〉 분야별 금융부채 전망

(단위: 조원, %, %p)

	'15년(A)	'16년	'17년	'18년	'19년(B)	증감(B-A)
전체(31개 ¹⁾) (총자산 대비 비율)	357.8 (53)	363.0 (52)	357.5 (50)	357.0 (49)	356.3 (48)	△1.5 (△5)
SOC 분야(10개) (총자산 대비 비율)	173.1 (54)	176.1 (53)	174.5 (52)	173.8 (51)	171.6 (50)	△1.5 (△4)
에너지 분야(12개) (총자산 대비 비율)	109.9 (43)	113.5 (43)	113.1 (41)	117.8 (42)	121.6 (42)	11.7 (△1)
금융·기타 분야(9개) (총자산 대비 비율)	74.7 (73)	73.4 (72)	69.9 (66)	65.4 (63)	63.1 (60)	△11.6 (△14)

주: 1) 39개 공공기관 중 무차입 경영 중인 산·기보, 한국공항 등을 제외한 31개
자료: 기획재정부

□ (분야별 부채 및 부채비율 전망) SOC와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부채는 '15년 대비 '19년에 증가하나, 금융·기타 분야 공공기관의 '19년 부채는 '15년 대비 감소함. 부채비율은 에너지와 SOC, 금융 기타 공공기관 대부분 하락함

- (SOC) 철도공사의 경우, 공항철도와 역세권 부지 등 자산매각과 경영효율화 등으로 부채비율이 두드러지게 감소될 것임
- (에너지) 가스공사는 신규투자 억제 및 해외사업 생산 본격화(호주 LNG 등)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로 부채비율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
- (금융·기타) 예금보험공사는 파산금융기관의 대출채권 회수 노력과 보유주식(우리은행, 한화생명, 서울보증) 매각 등으로 부채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임

〈표 3〉 분야별 부채 및 부채비율 전망

(단위: 조원, %, %p)

구분	'15년(A)	'16년	'17년	'18년	'19년(B)	차이(B-A)
SOC 계(11개) (부채비율, %, %p)	223.1 (224)	230.2 (216)	231.6 (209)	231.6 (203)	230.1 (197)	7.0 (Δ27)
LH	138.9 (388)	141.9 (380)	141.9 (360)	141.1 (345)	139.1 (332)	0.2 (Δ57)
도로	27.9 (91)	28.7 (90)	29.8 (90)	31.0 (90)	32.2 (90)	4.3 (Δ1)
철도	13.4 (324)	13.9 (194)	12.5 (173)	12.1 (174)	12.1 (185)	Δ1.4 (Δ139)
수공	14.4 (118)	15.1 (119)	15.4 (119)	16.3 (124)	16.4 (122)	2.0 (5)
철도시설 ¹⁾	20.1	20.6	20.8	20.9	20.9	0.8
에너지 계(12개) (부채비율, %, %p)	170.9 (198)	175.8 (195)	177.1 (185)	182.9 (184)	188.6 (182)	17.7 (Δ16)
한전	52.4 (101)	52.7 (98)	52.7 (94)	55.6 (98)	57.7 (100)	5.2 (Δ1)
한수원	28.2 (126)	29.7 (127)	30.4 (125)	32.4 (130)	34.8 (136)	6.5 (10)
석유	20.1 (272)	21.7 (307)	22.3 (310)	22.2 (295)	22.2 (271)	2.1 (Δ1)
가스	33.6 (334)	32.8 (299)	32.6 (280)	32.9 (261)	33.3 (248)	Δ0.3 (Δ86)
광물	4.4 (363)	5.1 (492)	4.5 (393)	4.5 (360)	4.4 (306)	Δ0.1 (Δ57)
금융·기타 계(16개) (부채비율, %, %p)	102.5 (156)	102.3 (147)	98.3 (123)	93.7 (109)	91.8 (100)	Δ10.7 (Δ56)
예보	35.5	33.2	26.3	21.8	19.2	Δ16.3
장학	12.6	13.2	13.7	14.3	14.9	2.3
중진공	15.1	14.8	16.5	15.1	14.3	Δ0.9

주: 1) 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산출 곤란
 자료: 기획재정부

- (당기순이익 및 이자보상배율) '15년 당기순이익은 한전 본사 부지 매각 등으로 '14년 대비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후에는 10~14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당기순이익 흑자 기관³⁾은 '14년 30개에서 '19년 32개 기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이자보상배율⁴⁾의 경우, '14년 1.8에서 '19년 2.1로 개선될 것으로 보임
 - 금융이자자가 있는 28개⁵⁾ 공공기관 중 이자보상배율 1이상인 기관은 '14년 21개에서 '19년 24개로 증가할 것임

〈표 4〉 '15~'19년 당기순이익 및 이자보상배율 전망

(단위: 조원, 배)


	'14년(실적)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당기순이익	11.5	17.2	11.4	14.1	11.0	10.5
이자보상배율	1.8	1.7	1.9	2.2	2.0	2.1

자료: 기획재정부

-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관리 차원에서 공공기관들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임
 -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
 - 공사채 총량⁶⁾이 준수되도록 분기별 점검을 추진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채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
 - 기관별 금융부채 대비 공사채 비율의 최근 3개년('12~'14) 평균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정⁷⁾
 -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실화하고, 구분회계제도와 사업 효율성 등을 검증하는 사후 심층평가제도를 정착시킬 계획

출 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5.09.16.)

- '15~'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공공기관 총 부채비율 금년 말 200% 미만 전망 

3) 흑자전환 기관(5개사): 석유, 광물, 철도시설, 산업단지, 여수항만, 적자전환 기관(3개사): 중소기업진흥, 공무원연금, 국민체육진흥

4) 영업이익/이자비용, 이자보상배율 1 이상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부채의 이자비용을 총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

5) 무차입 경영중인 신·기보, 한국공항공 등 8개사와 이자비용이 원가의 성격에 갖는 장학재단, 중소기업진흥, 농어촌 등 3개 기관 제외

6) 총량제 적용대상은 공사채와 단기유동성(CP, 전자 단기사채 등), ABS 등 모든 종류의 채권을 포함함

7) 대상기관 16개(18개 부채 중점관리기관 중 금융 공공기관인 예보와 장학재단은 제외함)

참고 1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 재무전망

(단위: 조원, %)

구분	기관명	항목	'15	'16	'17	'18	'19
	39개 기관 전체	자산	748.5	774.7	793.6	807.6	823.2
		부채	496.6	508.2	507.0	508.2	510.6
		부채비율	197	191	177	170	163
	18개 기관 전체	자산	582.7	600.9	610.7	621.8	633.6
		부채	430.8	438.7	433.6	436.3	439.1
		부채비율	284	271	245	235	226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	174.7	179.3	181.3	181.9	181.1
		부채	138.9	141.9	141.9	141.1	139.1
		부채비율	388	380	360	345	332
2	한국도로공사	자산	58.6	60.6	63.0	65.4	67.9
		부채	27.9	28.7	29.8	31.0	32.2
		부채비율	91	90	90	90	90
3	한국철도시설공단 ¹⁾	자산	18.2	18.6	18.8	18.8	18.8
		부채	20.1	20.6	20.8	20.9	20.9
4	한국수자원공사	자산	26.6	27.7	28.3	29.4	29.8
		부채	14.4	15.1	15.4	16.3	16.4
		부채비율	118	119	119	124	122
5	한국철도공사	자산	17.6	21.1	19.8	19.1	18.6
		부채	13.4	13.9	12.5	12.1	12.1
		부채비율	324	194	173	174	185
6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산	9.9	11.6	12.7	12.6	12.6
		부채	3.5	4.7	5.1	5.0	4.6
		부채비율	55	67	68	66	58
7	부산항만공사	자산	5.6	5.8	6.2	6.3	6.5
		부채	1.8	2.0	2.4	2.4	2.5
		부채비율	46	53	62	61	61
8	인천항만공사	자산	2.8	3.0	3.1	3.1	3.1
		부채	0.6	0.8	0.9	0.9	0.9
		부채비율	30	38	44	38	39
9	한국공항공사	자산	4.3	4.5	4.7	4.9	5.1
		부채	0.4	0.4	0.4	0.5	0.5
		부채비율	11	11	11	10	10
10	산업단지공단	자산	2.5	2.6	2.7	2.3	1.7
		부채	1.4	1.6	1.8	1.1	0.6
		부채비율	133	155	185	104	56
11	여수광양항만공사	자산	2.0	1.9	1.9	1.8	1.8
		부채	0.6	0.6	0.5	0.4	0.4
		부채비율	46	41	36	32	27

구분	기관명	항목	'15	'16	'17	'18	'19
12	한국전력공사	자산	104.4	106.3	108.7	112.5	115.4
		부채	52.4	52.7	52.7	55.6	57.7
		부채비율	101	98	94	98	100
13	한국수력원자력(주)	자산	50.6	53.0	54.7	57.4	60.4
		부채	28.2	29.7	30.4	32.4	34.8
		부채비율	126	127	125	130	136
14	한국중부발전(주)	자산	8.3	9.2	10.4	11.3	11.5
		부채	5.1	5.8	6.5	7.0	7.0
		부채비율	163	166	167	163	155
15	한국서부발전(주)	자산	9.5	9.8	10.0	9.9	10.8
		부채	6.0	6.0	5.9	5.9	6.5
		부채비율	169	159	148	144	152
16	한국동서발전(주)	자산	8.9	9.3	9.4	9.7	10.0
		부채	5.2	5.4	5.4	5.6	5.6
		부채비율	140	141	135	135	130
17	한국남부발전(주)	자산	9.6	10.1	9.9	9.7	9.7
		부채	5.9	6.3	6.0	5.7	5.6
		부채비율	162	164	154	142	138
18	한국남동발전(주)	자산	9.5	9.7	9.8	10.1	10.5
		부채	5.2	5.2	5.1	5.4	5.4
		부채비율	120	116	108	114	107
19	한국가스공사	자산	43.7	43.7	44.3	45.5	46.8
		부채	33.6	32.8	32.6	32.9	33.3
		부채비율	334	299	280	261	248
20	한국석유공사	자산	27.5	28.7	29.5	29.7	30.4
		부채	20.1	21.7	22.3	22.2	22.2
		부채비율	272	307	310	295	271
21	한국지역난방공사	자산	4.9	5.3	5.9	6.1	6.4
		부채	3.0	3.5	3.9	4.1	4.3
		부채비율	163	184	204	203	203
22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산	5.7	6.2	5.7	5.8	5.8
		부채	4.4	5.1	4.5	4.5	4.4
		부채비율	363	492	393	360	306
23	대한석탄공사	자산	0.7	0.7	0.7	0.7	0.7
		부채	1.6	1.6	1.7	1.8	1.8
		부채비율	자본잠식				
24	예금보험공사 ¹⁾	자산	21.2	19.0	18.0	15.8	15.8
		부채	35.5	33.2	26.3	21.8	19.2
25	한국장학재단 ²⁾	자산	13.4	14.0	14.6	15.2	15.8
		부채	12.6	13.2	13.7	14.3	14.9
26	중소기업진흥공단 ²⁾	자산	16.7	16.3	18.3	17.0	16.3
		부채	15.1	14.8	16.5	15.1	14.3

구분	기관명	항목	'15	'16	'17	'18	'19
27	한국농어촌공사	자산	10.4	11.0	11.2	11.2	11.2
		부채	8.5	8.8	9.0	8.9	8.9
		부채비율	440	412	414	402	391
28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산	31.3	34.2	36.9	39.2	41.6
		부채	7.5	7.8	8.2	8.5	8.8
		부채비율	32	30	29	28	27
29	공무원연금공단	자산	16.1	16.9	17.1	17.4	17.4
		부채	7.3	7.7	7.0	6.9	7.0
		부채비율	83	84	70	66	67
30	한국주택금융공사	자산	11.6	12.5	13.6	14.6	15.8
		부채	4.3	4.6	5.2	5.6	6.1
		부채비율	59	59	62	62	62
31	신용보증기금	자산	9.3	8.6	8.0	7.2	6.5
		부채	3.4	3.4	3.3	3.1	3.0
		부채비율	58	66	70	74	86
32	한국무역보험공사	자산	3.7	3.9	4.0	4.2	4.3
		부채	2.3	2.3	2.3	2.3	2.3
		부채비율	159	146	136	127	118
33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	2.8	3.1	3.4	3.8	3.9
		부채	1.2	1.5	1.8	2.2	2.2
		부채비율	76	92	112	132	135
34	기술신용보증	자산	3.2	3.1	2.9	2.8	2.8
		부채	1.2	1.2	1.1	1.2	1.2
		부채비율	57	62	64	70	72
35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산	4.1	4.0	4.0	4.0	4.0
		부채	1.3	1.4	1.4	1.4	1.5
		부채비율	48	54	54	57	58
36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	5.4	4.9	5.1	5.3	5.5
		부채	1.2	1.3	1.3	1.4	1.4
		부채비율	28	35	35	34	34
37	사립학교연금공단	자산	16.6	17.8	18.3	19.2	20.0
		부채	0.9	0.9	0.9	0.9	0.9
		부채비율	6	5	5	5	5
38	한국마사회	자산	2.6	2.6	2.7	2.7	2.8
		부채	0.1	0.1	0.1	0.1	0.1
		부채비율	6	6	6	6	5
3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산	0.2	0.2	0.2	0.2	0.2
		부채	0.1	0.1	0.1	0.1	0.1
		부채비율	42	42	42	41	41

주: 1) 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산출이 곤란

2) 정책자금 용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여타 기관과 부채비율 일괄 비교 곤란

참고 2 기관별 주요 재무건전성 지표 전망

기관명	이자보상배율(배)		부채비율(%)		당기순이익(억원)	
	'14년	'19년	'14년	'19년	'14년	'19년
토지주택공사	3.1	1.7	409	332	8,479	3,058
도로공사	1.2	1.1	92	90	1,165	1,608
철도공사	0.2	0.2	411	185	△3,383	△4,287
철도시설공단 ¹⁾	0.8	1.0	-	-	△290	188
수자원공사	1.2	0.9	112	122	2,993	2,064
인천국제공항	16.8	5.7	37	58	6,185	5,001
부산항만공사	3.0	2.2	45	61	1,071	1,065
인천항만공사	5.8	1.5	28	39	173	345
여수광양항만	0.2	2.3	56	27	△93	182
산업단지공단	0.4	2.6	119	56	△193	147
한국전력	1.2	2.0	130	100	10,399	14,843
수력원자력	4.2	3.4	129	136	14,405	9,803
남동발전	6.8	4.4	128	107	4,181	3,779
남부발전	2.3	1.3	151	138	640	1,014
동서발전	7.1	2.1	136	130	1,596	2,812
서부발전	3.1	2.3	156	152	1,332	2,323
중부발전	2.3	3.4	138	155	1,169	3,076
지역난방공사	1.2	2.6	190	203	707	1,282
석유공사	1.2	3.8	221	271	△16,111	4,694
가스공사	1.3	2.1	381	248	4,472	10,137
광물공사	영업손실	0.6	219	306	△2,635	489
석탄공사 ¹⁾	영업손실	영업손실	-	-	△712	△1,119
공무원연금공단	13.2	30.1	84	67	2,121	△168
체육진흥공단	583.3	520.3	49	58	3,076	△176
예금보험공사	0.6	1.7	-	-	3,809	10,421
주택도시보증공사	211.4	100.5	18	34	3,901	2,841
자산관리공사	8.1	1.6	48	135	960	354
주택금융공사	2.0	1.7	55	62	2,407	1,448

주: 1) 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산출 곤란
자료: 기획재정부



유사 및 중복 기능의 공공기관 통합 및 이관

- 지난 10월 15일 산림청은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녹색사업단 해산을 위한 관계법률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음
 - (문제점) 녹색사업단은 2006년 녹색자금 관리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업무 영역이 필요에 따라 확장²⁾ 되어 왔고, 사업인력보다 지원인력을 상대적으로 과다 운용³⁾한다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음
 - (방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녹색사업단을 해산하고 기존 기능은 전문성에 따라 연관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개정안이 통과될 시, 해외산림 개발, 산림탄소 상쇄제도 관리 등의 산림경제 업무는 ‘한국임업진흥공단’으로 이관되며,
 - 녹색자금 운용, 산림체험 교육 등의 산림복지 업무는 2016년 3월 신설 예정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될 예정임
 - (기대효과) 해당 기관의 해산은 유사 및 중복⁴⁾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발전적 해체로 평가할 수 있는 가운데 산림분야 양대 기능이 한국임업진흥공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통해 종합될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유사·중복 업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녹색사업단을 해체하면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신설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음
-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⁵⁾ 인증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간의 중복 기능을 해소하고자 HACCP 인증기관을 통합하였음
 - (현황) 식품 및 축산물 분류에 따라 HACCP 인증심사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안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 '06년 녹색자금 관리 → '08년 해외산림 개발 → '10년 산림탄소 상쇄제도 관리

3) 녹색사업단 지원인력 비중은 33%로, 총 36명 중 지원인력이 12명임

4) 산림탄소 상쇄제도 관리, 산림체험 교육 등

5)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함

*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라도, 제품별 유형분류에 따라 식품은 식품인증원, 축산물은 축산물인증원에 현황 규정상 각각 인증 신청을 해야 함

전관리인증원으로 분리 운영됨에 따라 현재 HACCP 인증기관은 이원화되어 있음


- (향후) 해당 인증기관들의 통합으로 식품·축산물 분류에 관계없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HACCP 인증심사를 수행할 계획임
- (기대효과) 양 기관으로부터 인증심사를 받아야 했던 식품 및 축산물 사업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양 기관의 유사 및 중복 인력(9명)을 인증심사 등 주요 업무로 재배치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표 1〉 식품 및 축산물 HACCP인증기관 비교('15년 현재)

구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70조의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의 5
공공기관 성격	기타공공기관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HACCP 인증업무수탁	'14년 말 부터	'06년부터
HACCP 인증범위	축산물을 제외한 식품 제조, 가공업소, 집단 급식소, 접객업, 소분 및 유통업소 등	축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집유, 도축장, 가공, 식육포장처리, 유통판매 작업장, 사료, 농장 등
조직규모	정원 69명	정원 115명

자료: 기획재정부

출 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10.19.)
 - 녹색사업단 발전적 해체, 산림경제·산림복지 업무, 임업진흥공단·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전문화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10.20.)
 - HACCP 인증 통합기관 설립 착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안 확정 -
- 이데일리 (2015.10.19.)
 - MB정부 때 조직·기능 확대됐던 녹색사업단 해체 

* 본 동향은 해당 기사의 내용을 가공하여 재생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외동향

■ 공공기관 관련 해외연구물

* 해외동향은 국제기구 및 해외언론에서 공기업 관련 이슈를 검색하여 그 목록을 제공합니다.
<편집자 주>

공공기관 관련 해외연구물

발행기관	제 목	발간일자	출처(링크)
OECD	공기업 지배구조 : OECD 국가들의 공기업 소유권 근거 현황 State-Owned Enterprises Governance : A Stocktaking of Government Rationales for Enterprise Ownership	2015.01.	olisnet
OECD	공기업 소유권 확장에 관한 비교 분석 보고서 Broadening the ownership of state-owned enterprises: a comparative report	2015.02.	olisnet
OECD	OECD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본 콜롬비아 공기업 지배구조 분석 Closed Session Item 4: Colombian SOEs : A Review Against the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15.02.	olisnet
OECD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M&A 비교 분석(주요 결과) FREEDOM OF INVESTMENT PROCESS A comparative study of mergers and acquisitions by privately- and state-owned enterprises	2015.03.	olisnet
OECD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M&A 비교 분석 A comparative study of mergers and acquisitions by privately- and state-owned enterprises	2015.03.	olisnet
OECD	신뢰와 비즈니스(TNB) 프로젝트: 비즈니스의 완전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더 나은 지배구조 TRUST AND BUSINESS (TNB) PROJECT	2015.03.	olisnet
OECD	투자규제자와 투자자에게 공기업이 가지는 의미 FREEDOM OF INVESTMENT ROUNDTABLE : Does state ownership raise additional challenges for investment regulators and owners?	2015.03.	olisnet
OECD	중국 중앙공기업의 유럽 및 프랑스에 대한 투자 Chinese Central SOEs' Investment in Europe and France: Overview and Impact	2015.03.	olisnet
OECD	경제발전 과정에서 공기업의 역할 State-Owned Enterprises in the Development Process	2015.04.	olisnet
OECD	노르웨이의 경쟁중립성 이행 ROUNDTABLE ON COMPETITIVE NEUTRALITY IN COMPETITION ENFORCEMENT-Note by Norway	2015.06.	olisnet
OECD	독일의 경쟁중립성 이행 ROUNDTABLE ON COMPETITIVE NEUTRALITY IN COMPETITION ENFORCEMENT-Note by Germany	2015.06.	olisnet

발행기관	제 목	발간일자	출처(링크)
OECD	미국의 경쟁중립성 이행 ROUNDTABLE ON COMPETITIVE NEUTRALITY IN COMPETITION ENFORCEMENT -Note by the United States	2015.06.	olisnet
OECD	공기업의 국제 무역 및 투자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BY STATE ENTERPRISES	2015.08.	olisnet
Worldbank	하이테크, 지역정보, 그리고 중국 공기업의 분권화 Hayek, Local Information, and the Decentraliz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China	2015.05.	구독자만 접근 가능
Worldbank	베트남 공공기관 개혁과 경제성장 Vietnam's Growth Strengthens despite Mixed Progress on Structural Reforms	2015.07.	http://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15/07/20/vietnams-growth-strengthens-despite-mixed-progress-on-structural-reforms
Worldbank	세르비아 공공재정 보고서 -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조세정책을 향해서 Serbia Public Finance Review - Toward A Sustainable and Efficient Fiscal Policy	2015.08.	http://pubdocs.worldbank.org/pubdocs/publicdoc/2015/8/543161438696455062/Serbia-Public-Financial-Review.pdf
Worldbank	월드뱅크의 세르비아 경제지원 정책 World Bank Supports More Competitive Economy and Job Creation in Serbia	2015.09.	http://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15/09/16/world-bank-supports-more-competitive-economy-and-job-creation-in-serbia
IMF	중국 기업 취약성 평가 Assessing China's Corporate Sector Vulnerabilities	2015.03.	http://www.imf.org/external/pubs/ft/wp/2015/wp1572.pdf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chatronics, Electronic, Industrial and Control Engineering (MEIC 2015)	변화와 반영 : 공기업 투자시스템의 개혁과 투자효용성 The Investment System Reform and the Investment Efficiency of the State-Owned Enterprise : Changes and Prospects	2015.04.	http://www.atlantis-press.com/php/publication=meic-15&frame=http%3A//www.atlantis-press.com/php/paper-details.php%3Ffrom%3Dauthor+index%26id%3D19724%26querystr%3Dauthor%253DZ%2526publication%253Dmeic-15
The Jakarta Post	인도네시아 철도사업 공기업 주도 컨소시엄 추진 State-owned enterprises to set up consortium for rail project	2015.09.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5/09/09/state-owned-enterprises-set-consortium-rail-project.html
Financial Times	중국정부 조심스럽게 공기업 민영화 추진 China cautiously embraces privatis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2015.09.	http://www.ft.com/cms/s/0/69253d76-633c-11e5-97e9-7f0bf5e7177b.html#a.xzz3neNGxcSa
The School of Public Policy - University of Calgary	캐나다 기존 견해보다 더 많은 공기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Report reveals Canada has far more state-owned businesses than previously thought	2015.09.	http://www.policyschool.ucalgary.ca/?q=content/report-reveals-canada-has-far-more-state-owned-businesses-previously-thought

발행기관	제 목	발간일자	출처(링크)
Rand Daily Mail (South Africa)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공기업의 본질 State-owned enterprises are doomed. It's their inherent nature	2015.09.	http://www.rdm.co.za/business/2015/09/30/state-owned-enterprises-are-doomed,-it-s-their-inherent-nature
EU	유럽연합 합병 규제의 공기업 적용 The application of the EU merger control rules to state owned enterprises	2015	http://ec.europa.eu/eclas/F/9F3SYJ9DP7L95492L85YC2HXQSVEGIE9FXLHTCLEDN2BPVQMEH-00623?func=full-set-set&set_number=808082&set_entry=000002&format=999
EU	정부 주도 경쟁 제한요인 State-initiated restraints of competition	2015	http://ec.europa.eu/eclas/F/68VFB5EYFGD83HRQEJKB3DSH772M629EY314TCR711P6SJ2H-00221?func=full-set-set&set_number=808072&set_entry=00004&format=999
EU	유럽연합 국가보조금 규정의 공기업 민영화 적용 방법 How EU state aid rules apply to privatisation of public enterprises	2015	http://ec.europa.eu/eclas/F/68VFB5EYFGD83HRQEJKB3DSH772M629EY314TCR711P6SJ2H-00259?func=full-set-set&set_number=808072&set_entry=000019&format=999
OECD	OECD 파트너 국가들에서의 공기업 소유권 유형 : 비교 분석 보고서 OWNERSHIP MODELS FOR STATE-OWNED ENTERPRISES IN OECD PARTNER COUNTRIES : A COMPARATIVE STUDY	2015.10.	olisnet
OECD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기준 리투아니아 공기업 지배구조 현황 보고서 Review of Lithuania's position relative to the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15.10.	olisnet
OECD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기업: 수평적 접근 State-owned enterprises in the global marketplace : a horizontal approach	2015.10.	olisnet
OECD	공기업의 국제화에 관한 우려 : 규제 당국, 정부 관계자 및 비즈니스계의 시각 Concern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isation of State Owned Enterprises : Perspectives from Regulators, Government Owners, and the Broader Business Community	2015.10.	olisnet
OECD	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팩트북 Factbook on th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15.10.	olisnet
OECD	라틴아메리카 공기업들의 이사회 관행과 자금조달 Board Practices and Financing for Latin American State-Owned Enterprises	2015.10.	olisnet

발행기관	제 목	발간일자	출처(링크)
Pinsent Masons LLP	중국 공기업 개혁지침 발행 China publishes guidelines on SOE reform	2015.11.	http://www.out-law.com/en/articles/2015/november/china-publishes-guidelines-on-soe-reform/
Vietnam Economic Times	베트남 최대보험공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4,400만달러 규모의 투자펀드모집 착수 Vietnam's BVIF launches \$44m investment fund to tap M&A, state-owned enterprises restructuring opportunities	2015.11.	http://vneconomicstimes.com/article/business/baoviet-fund-launches-44-million-fund
Tempo (Indonesian magazine)	인도네시아 공기업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 Capital Injection to Speed Up SOE Infrastructure Projects : Jokowi	2015.11.	http://en.tempco.co/read/news/2015/11/06/056716569/Capital-Injection-to-Speed-Up-SOE-Infrastructure-Projects-Jokowi
The Baltic Course	2014년 리투아니아 공기업 경영실적 발표 In 2014, state-owned enterprises (SOE) remained an important part of Lithuania's economy	2015.10.	http://www.baltic-course.com/eng/good_for_business/?doc=111855
Trend News Agency	우즈베키스탄 4개 공기업 지분매각계획 발표 Uzbekistan puts up for sale state-owned shares of four enterprises	2015.11.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454098.html

자료: 공공기관연구센터 홈페이지

VII

센터소식

- 제3차 한·중남미 공공기관 국제컨퍼런스 개최
- 2015 공공기관 정책 워크숍 개최



* 센터소식은 공공기관연구센터의 최근 활동 및 연구과제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제3차 한·중남미 공공기관 국제컨퍼런스 개최



□ 개요

- 일시: 2015년 10월 19일 ~ 21일
- 장소: 인터콘티넨탈 COEX
- 주관: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주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수출입은행

201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는 기획재정부·미주개발은행(IDB)·한국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제3차 한·중남미 공공기관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3차 회의는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사례(Korean, Latin-American and the Caribbean Experiences on Improving Oversight System for State-Owned Enterprises)’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 세계은행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등 중남미 주요국의 공공기관 정책 결정권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히,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홍영표 한국수출입은행 부행

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모든 참석자들은 국가별 공공기관 관리 환경이 다르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따른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함께하면서 3일간의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동 회의는 한국과 중남미 국가가 격년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며 2013년 제1차 회의는 한국에서, 2014년 제2차 회의는 멕시코에서 열렸다. 이에 따라 차년도에 있을 제4차 한·중남미 공공기관 국제컨퍼런스는 브라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주요 내용

제3차 한·중남미 공공기관 국제컨퍼런스에서는 한국과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공공기관 관리 및 감독 시스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고자 했다. 석유, 물 산업 등 한·중남미 주요 공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상호 실질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 및 성과평가 제도를 중남미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트레이닝 세션을 진행하였다.

〈10월 19일: 1일차〉

Session I : Centralized Oversight System

Session II : SO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Part 1)

SO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Part 2)

〈10월 20일: 2일차〉

Session III :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Part 1)

Session IV : Fiscal and Financial Discipline

Session V : SOEs in Water Resources Management

Session VI : SOEs in the Oil Industry

Session VII : Trade and Investment Financing for Korea-LAC Business

〈10월 21일: 3일차〉

Session VIII :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Part 2: Training session)

Session IX : SO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Part 3: Training session)

SO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Part 4: Training session)

SO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Part 5: Training session)

세션 I Centralized Oversight System

세계적으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대부분 중앙집권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임. 페루와 칠레 사이에 차이점은 있으나, 공공기관 이사회 멤버의 임명과 해임권한이 하나의 기구에 집중된 중앙집권적 통제 시스템을 갖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음. 한국은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에 의해서 공공기관 감독기능이 이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사회자:** 김형곤 (Fiscal and Municipal Dev. Lead Specialist, IDB)
- **발제자:** Federico Guala (World Bank, Senior SOE Consultant)
Patricia Gonzalez (Deputy Director, General Direction of SOEs, Ministry of Finance, Paraguay)
Sebastian Lopez Azumendi (Public Governance Specialist,
Program for Institutions of Infrastructure Sector, Brazil)
하세정 (정책연구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제 1] Centralized Oversight Systems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Latin America : The Case of Peru, Chile and Paraguay

Federico Guala

- (페루 사례) 페루의 경우 공기업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중앙집권적인 편에 속함
 - FONAFE(National Fund for Financing State Business Activity, 국영기업활동기금)의 이사회는 대부분 장관으로 구성되며, 공기업들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함
 - 재정경제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각료 이사회 회장(President of the Council of Ministers), 3명의 관련부처 장관(Line Ministers), 재정경제부에서 임명한 이사 등 총 6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짐
 - 페루의 공기업들은 FONAFE에 의하여 5개년 전략적 계획 아래에 감독이 이루어지는데 해당 계획에는 공기업의 결과물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성과지표와 관련 목표들을 포함함
 - 석유부문을 제외한 모든 중앙정부 공기업(정부가 주요 주주인 경우)들을 관리함
 - FONAFE는 공기업의 재무제표와 연간보고서를 통합관리하기도 함
- (칠레 사례) 칠레의 경우도 중앙집권적 공기업 지배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임
 - SEP(State-Owned Enterprises System, 공기업 시스템)는 9명의 위원들과 1명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모두 집행부에 의해서 임명됨

- 칠레 공공기관들은 각자의 이사회를 통해서 주주총회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SEP는 간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이 다른 국가와의 차이점임
 - SEP는 명확한 규칙과 조건 아래 모든 공공기관의 이사회 멤버를 지명하는 권한을 지님
 - CODELCO(구리)와 ENAP(석유)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들은 SEP의 관리범주 대상에 해당함
- 또한 공공기관의 재무성과를 통합한 연간보고서를 관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함
- (파라과이 사례) 파라과이의 경우, 공기업에 대하여 자문해주는 방향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집권적인 지배구조로 공기업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음
- CNEP(National Council of SOEs, 국립 공공기관심의회)은 재무부와 2개의 해당부처, 법무장관에 의해 형성된 4명의 멤버(high-level council)로 구성되며, DGEP(General Directorate of SOEs, 공기업 집행위원회)는 기술 및 집행 부서로 CNEP에 직접적으로 종속됨. 이들은 공공기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함
- 법인격체인(corporated)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법무부가 경영활동 등에 간섭을 하나, 법인격체가 아닌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대신 매년 국고로의 자원 교환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재무부와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 해당 계약에 관여함
 - CNEP는 공공기관 이사회 멤버와 기관장을 추천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함
 - 부분적으로 비금융 분야의 공공기관들은 CNEP와 DGEP의 관리대상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 대부분 공공기관의 다년간 성과 협약(Multiannual Performance Agreements, PA)은 DGEP에 의해서 승인됨
- CNEP와 DGEP에 의해서 공공기관 재무정보의 통합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음

[발제 2] Challenges of State-Owned Enterprises(SOEs) Oversight: The Case of Results-Based Management Systems

Sebastian Lopez Azumendi

- (성과 위주 관리시스템) 성과 위주 관리시스템은 이론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므로 정책을 반영할 때 주의해야 함
- 성과 위주 관리 측면에서 공공부문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통제기관의 역할과 범위를 골고루 고려해야 함
- 공공기관은 법적 기반을 근거로 국가 전략을 고려하여 경영위원회와 경영평가 계약을 체결함

- 이행단계에서는 정부가 주 채널이 되어 어떤 결과를 목표로 설정할지 여부, 해당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한 핵심 변수를 고려해야 함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파트너십 차원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
- 효과적인 공공기관 성과 기반 감독관리체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리 미시적 요소(관리기구, 동기 부여, 감독 및 평가)와 거시적 요소(전략적 계획, 기업 지배구조 정책, 공공기관 부문별 정책, 관리기구의 디자인, 각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지시체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함

[발제 3] Strengths and Weakness of Oversight Model: Paraguay Case

Patricia Gonzalez

- (파라과이 공공기관 개혁) 파라과이는 1991년 민영화 법이 제정되었으며, 2008년 공기업위원회 설립 법령(Council of Public Enterprises, No.163), 2013년 국가 공공기관위원회 설립 법령(National Council of Public Enterprises, No.5058)이 제정되었음
 - 책임경영 문화가 형성되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기존 공공기관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당 법령을 제정하였으며, CNEP(National Council of SOEs, 국립 공공기관 심의회)와 DGEP(General Directorate of SOEs, 공기업 집행위원회)를 통한 중앙집권적 지배 구조를 지향하게 되었음
- (기존 통제 시스템의 장점) 공공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자료 중 핵심정보를 통합하고, 긴 기간 동안 실제로 이용함에 따라 기존 통제시스템의 견고함이 증명되었음
 - 감사보고서를 발행함에 따라 투명성이 제고되었으며, 독립적인 감사 조직 편성을 위한 새로운 절차와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기존 통제 시스템의 단점) 분산된 지배력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제한이 존재함
 - CNEP(National Council of SOEs, 국립 공공기관심의회)이 정부의 정책 목표를 직접 이행하기에는 자율권이 미약함
 -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될 정도로 지배체계가 약함
- (CNEP/DGEP 관련 전략적 계획: 2015~2017) 지배체제와 법적 틀, 재정적 자율권을 강화시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성이 제고된 환경에서 공공기관을 운영하겠다는 전략적 계획을 마련하였음

- CNEP(National Council of SOEs, 국립 공공기관심의회)에 대한 전략적 계획을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실행하고, 칠레의 SEP과 페루의 FONAFE를 참고모델로 삼아 CNEP와 DGEP에 의한 공공기관 지배기능이 작동하도록 할 계획임

[발제 4] Oversight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하 세 정

- (한국 공공기관의 통제 시스템) 한국은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에 의해서 공공기관 통제가 이루어지는 이중 통제 시스템이 특징임
 - 기획재정부는 운영과 고용규모, 예산 등 같은 일반적인 경영관리를 감독하고, 관련 부처는 해당 산업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법에서 규정한 주요사업을 감독하는 역할을 함
 - 각 공공기관은 이사회와 경영진을 통해서 사업 목표를 비롯하여 주요 프로젝트, 재정 및 운영 계획을 결정함
 - 한국은 공공기관의 중요한 이슈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심의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관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존재함

- (한국 공공기관 분류 및 성과평가) 한국 공공기관 여부는 정부의 지분과 총수입 대비 정부 보조금의 상대적 금액, 정부의 통제수준 등에 따라 결정됨
 - 공공기관 유형(공기업, 준정부, 기타)은 고용규모와 자산규모, 총수입 대비 자체수입비율에 의해서 결정됨
 - 한국의 공공기관 성과평가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약 150명의 평가위원회에 의해서 연 단위로 진행되며, 주요 사업에서의 성과와 기관 운영 효율성에 대한 평가 비중이 가장 큼
 - 공공기관은 재무자료와 인력현황, 주요사업에 대한 공공 정보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세션 II SO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Part 1)

이 세션은 한국, 니카라과, 에콰도르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s)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해 주로 다루었습니다. 한국의 경영평가는 1983년부터 시작하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성과평가, 정보공개, 성과급제라는 3가지 수단을 통해 공기업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니카라과는 SNP를 통해 각 사업별(Projects) 계약에 기반을 둔 평가체계를, 에콰도르는 손익분기점과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무적 평가와 고객 만족도 등에 초점을 둔 비재무적 평가의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실시하고 있음.

- **사회자:** Carlene O'Connor (Deputy Director of Public Enterprises Division,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Jamaica)
- **발제자:** **임상준** (평가분석과장, 기획재정부)
Lourdes Payan (Monitoring and Evaluation Projects Specialist, Nicaragua)
Fausto Washima (Coordinador-General, State-Owned Enterprises, SENPLADES, Ecuador)

[발제 1] History and Status of the Korean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임 상 준

- 한국의 공공기관 평가는 공공기관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정도를 평가지표에 따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함
 - 바람직한 경영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지표가 경영관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경영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환류작용을 통한 경영관리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함
 - 바람직한 평가지표를 통한 경영평가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내·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음
-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 왔으며,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근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8조, 「공운법 시행령」 제27조이며, 경영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은 매년 발행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 한국의 경영평가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환경 변화 및 고객 수요가 반영됨으로써 단계별로 평가의 초점이 변화하여 왔음
 - 단기 목표에 대한 평가에서 ‘단기 목표 평가 + 절차적 측면에 대한 평가’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무엇을 +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로 변화했음

- 또한, 성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환류작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변화하였으며, 따라서 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함

□ 경영평가는 기관평가, 기관장평가, 상임감사평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실시됨

-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평가로 평가주기는 1년이며, 평가 범주는 크게 경영효율성 평가와 주요 사업 평가로 구분되는데 그 비중은 동일하며, 평가결과는 직접적으로 성과급과 연결되어 있음
 - 평가지표는 경영효율성 지표(조직의 인적·물적 생산성에 대한 지표)와 주요사업 지표(고유 목적사업에 대한 지표)로 나뉘는데, 경영효율성 지표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지표이고, 주요사업 지표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가 만들어짐
 - 계량 및 비계량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를 하며, 전년 대비 성장률에 초점을 두어 평가함
- 기관장평가는 18개월 이상을 재임한 기관장을 대상으로 중·장기 관점의 경영성과협약 이행 실적을 평가하며, 상임감사평가는 6개월 이상 재임한 감사를 대상으로 감사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함. 두 평가의 결과는 모두 인사평가 자료로 활용함

□ 경영평가 관련 이슈는 ① 평가기관, ② 평가방법, ③ 평가주기 등이 있음

- 평가기관이 정부의 내부 조직과 같은 내부 기구일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으나 평가의 중립성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음. 반대로 민간평가단과 같은 외부 기구에서 평가를 시행할 경우, 공정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평가의 일관성을 담보하지는 못함
-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계량평가는 효율성 평가에 적합하고, 결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표들 사이에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비계량적 평가는 공공성과 같이 정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며, 절차를 평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평가자 임의대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따라서 평가방법은 해당 평가의 초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리해야 함
- 평가주기는 단년도 평가와 다년도 평가로 나눌 수 있음. 단년도 평가는 매년 경영관리 효율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통제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평가 시행에 따른 부담이 있음. 다년도 평가의 경우에는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을 평가할 수 있으며, 기관에 자율성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으나, 무책임한 경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경영평가가 바람직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첫째, 평가목표를 명확히 하고, 둘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미리 준비하고, 셋째, 공공기관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가대상자인 공공기관들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적절히 고안하여야 함

[발제 2] Physical and Financial Monitoring of Public Investment Program as a support tool for Investment Management of Nicaraguan SOEs

Lourdes Payan

- 니카라과(Nicaragua)는 재정관리 및 예산체제법(Law no. 550, Financial Administration and Budgetary System Law)에 근거하여 중앙정부 및 공기업이 실시하는 모든 공공투자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투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총괄하는 기구를 SNIP(Sistema Nacional de Inversion Publica, National System of Public Investment)라고 명명함
 - 니카라과는 국가가 시행하는 투자가 초기에 예상했던 투자금액보다 많아지고, 투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관리 및 예산체제법을 제정하였음
 - 공공투자에 관한 시스템인 SNIP는 설립근거법은 없으나, 설립에 관한 법령(Decree no. 61-200, Creation of SNIP)이 존재함
 - SNIP의 위원회(governing body)인 DGIP는 재무 및 공공여신부 소속으로 ‘프로젝트 은행(Banco de Proyectos, Project Bank)’ 운영을 통해 공공투자사업 전반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음
 - DGIP에서 각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배분을 시행하며, 프로젝트별로 총 15% 내의 금액 조정이 가능함

- 모든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사업 중 국가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SNIP의 공공투자 프로그램(PIP, Public Investment Program)에 포함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술적인 부분이 증명되어야 하고, DGIP로부터 승인되어야 함
 - DGIP는 예산 수립과 실행에 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DGP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 예산 수립 시 예산에서의 공공투자에 관한 비중, 공공기관의 투자 및 지출 수준을 정함

- DGIP는 공공투자에 대한 물리적·재정적 감독기능을 수행하는데, 이것은 전체 프로그램 관점에서 접근하되 각 사업별(projects) 활동으로 구분하고, 또 그 안에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구분하여 세부단위에 대한 예산 집행 실적을 감독함
 -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투자 전의 시작단계, 투자 실행 단계, 자금 조달 및 계약 관리 등 다양한 단계에서 물리적·재정적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

- 모니터링은 크게 입찰단계와 계약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투자집행 일정과 소요금액이 실제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감독하고 평가함
 - 계약서상의 진행 속도와의 편차가 20% 초과하여 차이가 나면 ‘위협(Critical)’, 10% 초과 20% 이하이면 ‘경고(Delayed)’, 10% 이하면 ‘보통(Normal)’의 결과를 줌
 - 계약에 관한 모니터링을 위해 DGIP와 SNIP는 상위감독기관인 대통령실과 국회에 세부단위 별 소요금액, 감가상각 등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계약서를 제출함

- 계약에 기반을 둔 모니터링은 공공기관의 중장기 사업과 다년도 예산 수립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현실적인 성과와 비용 간의 관계에 대해 가장 최근의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공투자를 가능하게 함
 - 계약 기반의 물리적·재정적 감독체계가 성공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평가됨

[발제 3] Ecuador's experience in assessing public companies in the Central Government

Fausto Washima

- 에콰도르의 경우, 1990년대에 에너지·통신 등의 분야에 국가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민영화를 시도하였으나, 2008년 헌법에서는 1990년대의 원칙과는 다르게 해당 분야의 공기업 설립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1990년대 당시 민영화를 시행하지 않았던 ‘전력’과 같은 부문을 전략적 부문으로 명명하고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함

- 에콰도로 공기업은 2009년에 제정된 공공기업에 관한 법률(LOEP, Ley Organica de empresas publicas) 체계하에서 공기업의 구성, 조직 및 운영, 재무 관리 등에 대한 통제를 받고 있음
 - 국가기획부 장관, 분야별 장관, 공화국 부통령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공기업 정책 목표 설정, 사업 예산 승인, 보수 수준 결정, 이사회·경영진 임명 등 공기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실시함
 - 공기업 경영진을 임명할 때 여러 기준을 두루 고려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이 배제될 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쓰고 있음

- 에콰도르 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재무적·비재무적 평가가 있으며, 재무적 평가는 손익분기점을 이용한 평가와 재무제표를 이용한 평가가 있음. 또한, 비재무적 평가로는 고객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있음

- 2014년 에콰도르 공기업 투자는 6,858백만 美달러로, 국내총투자(8,696백만 美달러)에서 공기업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손익분기점을 이용한 재무적 평가는 ① 손익분기점을 넘었으며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영업이익 \Rightarrow 영업비용, 총영업 수익 = 총운영비용), ② 손익분기점을 넘었으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기업(영업이익 \Rightarrow 영업비용, 총영업 수익 < 총운영비용), ③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도 못했으며, 수익도 창출하지 못한 기업으로 나누어 평가를 수행함
- 재무제표를 이용한 평가는 모든 공기업은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고, 신뢰성이 확보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산, 자본, 부채의 순위를 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임
- 비재무적 평가로는 수익 창출을 위한 공기업과 다른 공익적 목적을 위한 공기업을 구분하여, 고객의 만족도 측면에서 접근하여 평가하는 방법임

세션 II SO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Part 2]

이 세션은 앞선 세션에 이어 브라질, 온두라스, 우루과이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s)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음. 브라질은 BSC(Balance Score Card)를 통해 경제적·재정적 측면, 내부 프로세스 측면, 인적자원관리 측면, 고객관리 측면의 4개 분야를 고르게 평가하고 있으며, 온두라스는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투입 요소를 바탕으로 도출한 산출물을 통해 성과를 평가하고 있음. 우루과이는 2015년에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책임 부문, 재정적인 부문, 전략계획수립 부문, 고객 부문을 평가하고 있음

- **사회자:** 하세정 (정책연구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제자:** Elvira Schulz (Coordinator General, Coordination of Evaluation of Enterprises,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ing, Brazil)
Carlos Martinez (Finance Secretary, Honduras)
Graciela Perez Montero (Director, Division of Public Enterprises, OPP, Uruguay)

[발제 1] SO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Brazil

Elvira Schulz

- 브라질 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간접 분석, 직접 분석, 정보 공유 및 사후 지원의 3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이러한 평가체계는 5개 기업에 대한 모의 테스트를 시행한 후 최종적으로 도출하였음
-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2007년에 제정한 Decree no. 6021가 있으며, 여기에는 공기업 평가 기준과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음

- 이러한 평가는 부처 간 기업지배구조 및 정부소유 지분 관리위원회(CGPAR, Inter-ministerial Commission of Corporate Governance and Management of State Shareholdings)에서 담당하고 있음
 - 현재 130여개의 연방 공기업과 5개 그룹의 85개 자회사, 5개 그룹과 별개인 27개의 독립회사, 그 외 재무부 소속의 18개 회사가 존재하며 총자산은 1.6조 미달러임
 - 또한, 브라질은 공기업에 대한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기업 정보 공개를 위해서 2014년에 Decree no. 8189를 제정하였음
- 공기업에 대한 간접 분석은 경제적·재정적 측면, 내부 프로세스 측면, 인적자원관리 측면, 고객 관리 측면의 4분야에서 각 영역별로 점수를 매기는 균형점수카드(BSC, Balance Score Card)를 종합하여 A, B, C, D 등급을 매기는 분석 방법임
- 각 영역은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다시 세부 지표들로 구성되며, 그 세부 지표별로 점수를 매기고, 지표의 중요성에 따라 다른 가중치가 부여됨
 - 경제적·재정적 측면의 수치는 개별 공기업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나머지 3개 영역은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질문지를 토대로 분석함
 - 설문지는 총 8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며, 3개 영역에 대한 지표를 수립할 수 있는 질문으로 설문지 내용을 구성함
 - 세부 지표의 점수를 종합하여 하나의 영역에 대한 총점수가 도출되며, 이렇게 도출된 4개 영역의 점수를 다시 가중평균하여 간접 분석의 최종 점수가 도출됨
- 직접 분석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 실사 및 회의를 하는 것으로, 직접 분석은 전체 기업에 대하여 모두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 분석 결과를 통해 직접 분석할 기업들을 선택함
- 간접 분석과 직접 분석을 통한 점수를 합하여 최종 점수를 도출하며, 'A'를 받은 기업을 모범사례로 지정하여 다른 기업들에 권고함. 또한 'D'를 받은 기업들에는 점수가 저조한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간접 분석과 직접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보고서는 회사의 상태를 진단하는 자료로 사용되며, 해당 기업 이사회에서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업을 개선해야 함

[발제 2] SOEs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Honduras

Carlos Martinez

- 온두라스(Honduras)는 예산법(Organic Law of Budget)에서 정한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관리, 기획, 규제 등 공공재원의 최적 통제를 통해 정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온두라스의 성과 평가 및 감시기구는 정부조정부(DGID, Directorate General of Decentralized Institutions), 예산청(DGP, Directorate General of Budget), 기획경영평가처(UPEG, Unit of Planning and Management Evaluation)가 존재함

- 온두라스는 기업 운영 및 조직 관리 측면, 예산 관리 측면, 재정 관리 측면, 성 평등 측면의 4가지 영역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세부 지표를 구성함
 - 평가를 위해서 해당 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제출하면 재무부가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담은 보고서들을 작성하여, 각 공기업의 고위 관리직과 대통령에게 제출함
 - 성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투입 요소로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연간 운영계획 보고서, 인적자원에 관한 보고서가 요구됨
 - 상기의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분기별 기관평가 보고서, 분기별 사회보험투자 보고서, 분기별 인적 자원 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예산 결산 보고서, 분권화된 공공부문(Decentralized Institutions)의 지출 분석과 감독 보고서가 산출물로 도출됨

- (주요 성과) ① 더 많은 공공기관(Public Institution)에 경영정보 통합체계 적용, ② 새로운 경영정보 통합체계로 수정·보완, ③ 인적관리통합체계 실행, ④ 평가체계와 관리감독, 예산과정을 연계하고 의사결정과정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범주의 정보 이용, ⑤ 앞선 주요 성과들을 통해 각 기관들의 문화가 개선됨
 - 현재 인적·재정정보를 통합하여 더욱 새로운 경영평가 통합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내부의사결정 과정에서 평가 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 중임

[발제 3] Corporate Governance: Budgetary Framework, General Supervision and SOEs Financing in Uruguay

Graciela Perez Montero

- 우루과이(Uruguay)의 공기업 규제는 대통령 기획실인 OPP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과 집행

계획을 위주로 하여 공기업을 평가하고 있음

○ OPP는 사회경제정책 수립, 예산 평가, 공공기관 평가에 관여하며, 다른 기관과 달리 의회의 감시를 받지 않음. 또한 OPP의 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 임명됨

□ 우루과이(Uruguay)는 성과 평가의 새로운 도구로 ‘공공재정에 관한 법’을 재정하여, 2015년 새로운 평가를 도입함. 이는 헌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 이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준공기업에도 적용함

□ 새로운 평가제도는 경영책임 부문, 재정적인 부문, 전략계획수립 부문, 고객 부문을 모두 포함한 평가로서, 행정부는 이를 통해 각 공기업들이 해당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성과급에 반영함

○ 공기업은 먼저 기술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서가 승인되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

○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뿐만 아니라 12~14개 정도의 계량화된 지표를 제시해야 하며, 획일화된 지표는 불가능함. 또한 이러한 지표는 예산계획서에 첨부되어 있어야 함

○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성과급 지급을 위한 계량 지표 값이 ‘0’이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음

세션 III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중남미 공기업의 정보공개 투명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명확한 기준 수립이 필요함. 아르헨티나의 경우 공기업의 정보공개 및 투명성 수준 조사 결과 그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음. 정보공개는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필요한 주장을 하기 위해 활용되는 등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앞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공기업 임직원의 정보공개와 투명성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사회자:** Roberto Garcia Lopez (Executive Secretary CoPLAC-MfDR, IDB)
- **발제자:** Sandra Elena (Director, Justice and Transparency Program, CIPPEC, Argentina)
 Dagoberto Pavon (Director, Decentralized Institutions, Honduras)
 Ron Snipeliski (Director General, Legislation and Consultation, Ministry of Finance and Public Credit, Mexico)
 Murilo Barella (Director, Federal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Brazil)

[발제 1] Improving Open Government: Transparency and access to information in public enterprises in Argentina

Sandra Elena

- 아르헨티나 공기업의 정보공개 투명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준 수립 필요
- 대부분의 중남미국가에서 헌법상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보장하는 법률은 미제정 상태
- 아르헨티나의 정보공개와 투명성 관련 조사결과, 그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비밀을 이유로 상당수 공기업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으며 공개된 정보도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음
- 향후 관련 법률 제정과 임직원에 대한 역량 강화가 시급함
 - 공기업의 특성상 보호되어야 하거나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예외사항을 규정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정보공개 기준이 제정되어야 함
 -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공기업의 정보공개 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함

[발제 2] 온두라스의 공공데이터 접근 관련 법률 소개

Dagoberto Pavon

- 온두라스의 공공데이터 접근 관련 법률은 2006년에 제정
 - 기존에는 개별 공기업들의 자율적인 정보공개에 의존하였으나, 법률 제정 이후로는 모든 공기업이 예산, 회계보고서, 직원 수, 급여 등 많은 정보를 필수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시민들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는 매월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가급적 정보의 완전성을 갖출 것을 의무화
 - 시민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10일 내에 답변 및 제공하여야 함
 - 다만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헌법상 명시된 권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비공개 가능
 - 비공개는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정보접근성센터'가 정보의 기밀 여부 결정

- 정보공개와 관련된 포상 및 처벌 규정 존재
 - 공기업 평가 시에도 투명성이 주요 기준으로 적용됨. 모든 의무를 준수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규정도 존재함
- 시민들의 정보 접근을 통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 참여 제고 목표

[발제 3] Transparency practices: in Mexican state-owned enterprises

Ron Snipeliski

- 헌법에 투명성 관련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으나 2002년까지는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어 있지 않았음
 - 2002년 연방정부의 투명성 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 사회에도 투명성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함, 현재는 정보 접근성이 상당히 제고된 상태
- 2014년 개헌을 통해 정보 접근성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심화된 내용이 규정됨
 - 조직, 예산 및 재무, 계약, 법적 내용, 기타의 5개 카테고리가 있으며 이 안에는 광범위한 공개 대상 정보 리스트 존재
 - 공개 제외사항으로는 상업적인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정보, 은행거래에 관한 비밀 정보, 재판중인 내용 등이 있음
- 공개 대상 중 상업적 성격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적립, 경영평가 관련 지표 개발 등의 향후 과제를 안고 있음

[발제 4] Release of Public Information

Murilo Barella

- 브라질은 경제·금융정보, 재정부의 재무지표 등을 공개하고 있음
 - 2010년부터 국제회계표준에 따라 공기업 또한 민간기업과 동일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정부와 공기업의 투명성 의무) 'Open Data'라는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 공기업의 예산에는 국가 감독하에 있는 공기업의 예산, 감독하에 있지 않은 공기업들의 예산, 독립기업체의 예산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의 집행 내역을 2개월마다 정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그 외 정보 공개) 각 기관의 기능, 조직도, 주소·전화번호, 영업시간, 지출 관련정보, 입찰정보, 공개경매, 계약정보 등이 제공되어야 함
 - 브라질의 증권거래위원회는 13개 항목에 걸친 다양한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있음

세션 IV Fiscal and Financial Discipline

한국의 경우, 2009년 이후 공공기관의 부채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라 공공부채 관리정책과 부채감축 계획을 추진함. 부채감축의 성과 및 평가는 긍정적으로 후속조치를 통해 부채감축의 성과를 극대화 할 예정임. 자메이카의 경우 4대 기업(Air Jamaica, NROCC, CAP, SCJ)이 2004년 이후 정부재정 악화를 가중시켜 정부 주도의 급속한 민영화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중남미 국가들은 급속한 민영화를 추진중에 있지만, 각국의 재정상황이나 민영화에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경영구조(국가의 주체성)와 임의적인 거버넌스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사회자:** Adan Enrique Garcia (Deputy Director General, State Prices, Fees and Dividends, Ministry of Finance and Public Credit, Mexico)
- **발제자:** 김은성 (재무경영과장, 기획재정부)
Ann Marie Rhoden (Director of Public Enterprises Division, Ministry of Finance, Jamaica)
Gerardo Reyes-Tagle (Fiscal Economic Senior Specialist, IDB)

[발제 1] Public Institutions Debt Management Policy

김은성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한국은 2009년 이후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와 공익 사업으로 인한 부채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왔음
- (공공부채관리계획)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011~)
 -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기업/준정부기관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재무상태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약 96%를 차지함
 - 기관의 중장기적 경영목표, 전망, 부채관리방향 등은 물론, 계획의 이행 여부도 매년 평가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 (부채감축계획) 18개 중점관리기관 선정 및 고강도 자구노력 시행
 - 이는 부채과다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기존 계획 대비 부채를 감축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정보공개, 예비타당성 확대, 심층평가 시행 등 3개는 이미 추진을 완료함
- (부채감축의 성과) 기존 부채증가를 고려할 때 한국정부 공공기관 부채감축은 유의미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제도적 기반 강화, 구분회계제도 강화, 예비타당성 평가 확대, 이행실적의 주기적 모니터링, 정보의 대국민 공개도 확대할 예정임

[발제 2] Fiscal and Financial Results of SOEs

Ann Marie Rhoden

- (공공기관의 부채) 자메이카는 현재 200개의 공공기관의 설립되어 있으며, 이 중 121개는 유한회사의 형태로 1979년에 설립되었고 이 중 82개 기관(약 40%)은 국영기업의 형태임
 - 2003-2014년의 주요 21개 기업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의 총부채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국영기업에 의해 증가하였음
 - 자본수익률, 자산수익률은 산발적인 상/하향을 보이며, 이는 정부의 자본출연이 매우 적기 때문에 부채가 불가피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 기인함
 - 특히 4대기업((Air Jamaica, NROCC, CAP, SCJ)이 산발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들을 제외하면 점진적 증가의 경향을 보임
 - 자메이카는 급속한 민영화정책 등 부채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기업지배구조) 대부분의 공공기관 실적은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거버넌스의 부재와 부적절한 자본화가 원인으로 파악됨
 - 2012년에 법인화와 관련한 ‘공공기관 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대출 시 재무부 승인이 필요하도록 하였고, PBMA(Programme budgeting and marginal analysis)를 통해 우수한 프로젝트만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함
 -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법령 제정을 통해 재무리스크 감소가 기대됨

[발제 3] State Owned Enterprises(SO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LAC): Overview and Fiscal Risks

Gerardo Reyes-Tagle

- 대부분의 중남미국가는 급속한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성과는 높다고 보기 어려움
 - 석유와 전력 등 에너지 부문은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가 국영기업의 형태로 남아 있으며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이 GDP의 15%를 유지하는 등 과거와 큰 차이가 없음

- 원인은 공공기관 지배 및 관리의 문제와 임의적 거버넌스 정도로 볼 수 있음
 - (경영구조 및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지배 문제) 관리자가 아닌 대리인에 의한 관리 때문에 명확한 문제의 정의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음
 - 관리자들의 성과(재정 부족과 적자를 포함)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및 특혜 사례로 인한 긴축재정의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는 점도 문제임
 - (임의적인 거버넌스 구조) 규제와 총괄의 다양한 주체(대통령실, 의회, 재무부 등)로 인해 목표 설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심지어 상반된 목표가 동시에 설정되는 경우도 있음

- (개선방안) 정부의 소유권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개선방안을 논할 수 있음
 - 정부가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 책임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가능하며 보다 나은 관리감독 방안 수립이 가능함. 단, 중앙정부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정책 변동이나 중앙집권화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정부가 투자해 그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 정부의 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모니터링에 대한 공공기관 운영의 국제적인 기준이 존재함
 - 정부가 소액을 지원한 경우는 앞선 문제와 유사하지만 예산의 문제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매우 큰 규모의 공기업에 해당되는 문제이고 중남미의 일부 국가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함

세션 V SOEs in Water Resources Management

중남미에서 상하수도 공급은 공공성이 강조되어 기본적인 인권으로 간주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다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격 수도계량 시스템 도입, 성과연동 보수체계 적용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코스타리카의 경우 도시화, 기후변화 등으로 초래될 수도공급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존의 주요 사업영역인 국내 물 공급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 해외사업 등 적극적으로 신사업을 개척하고 있음.

- **사회자:** Alvaro Santiago Caceres (Director of Planning and Investment, Public Water Company, Ecuador)
- **발제자:** Milton Machado (Chairman, State Sewage and Water Works, Uruguay)
Manuel Salas (Deputy General Manager, Aqueducts and Sewage Systems, Costa Rica)
한학섭 (해외사업본부 사업계획팀장, 한국수자원공사)

[발제 1] Water Resources Management Experience of OSE

Milton Machado

- 우루과이에서는 OSE라는 공기업이 수자원 관리업무 수행
 - 상·하수도 서비스를 독점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 개발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는 기업으로 이익의 25%를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에 재투자하고 있음
 - 성과연동 보수체계 도입으로 흑자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섹터별로 지표를 구성하여 성과 관리
- (사회적 책임 이행) 수도서비스를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하여 농촌지역에 식수를 제공하고, 수도료를 저렴하게 책정하며, 청소년 마약퇴치·자립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포용정책 마련
- (경영 및 품질관리 제고) 댐 건설 등 인프라 확충, 노후 상·하수도망 교체, 원격 수도계량 시스템 도입 추진으로 수자원관리 고도화 및 이동식 수(水)처리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처리 모듈화 시스템 도입

[발제 2] Challenges of the Services of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in Costra Rica

Manuel Salas

- (문제점) 아직 28.2만명이 제대로 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노력 필요하며 수자원의 공급과 소비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앞으로의 큰 도전과제임

- 수자원 오염을 규제하고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위해 토지 사용관리에 관여하고 있음
 -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향후 수도 공급 커버리지가 감소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고, 지역별로 커버리지가 상이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
 - 도시화로 인한 수도 공급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토지이용이 변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인 정책 수립) 향후 진행될 투자계획까지 반영하여 전반적인 요금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발제 3] K-water's Overseas Business

한 학 섭

- 수자원공사의 주요 사업분야는 수자원관리, 품질관리, 수도 공급, 물류, 청정에너지 개발, 도시개발 등 6개임
 - 다목적 댐 18개, 물 공급 댐 14개, 보 16개를 운영하고 있음
 - 식수공급을 위해 34개의 벌크(bulk) 물 공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2개 지방자치단체와 물 공급 시스템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청정에너지) 수력, 조력, 풍력발전을 통해 우리나라 청정에너지 공급의 25%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아태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254MW)임

- (해외사업) 현 정부는 K-water Program과 관련하여, 기술·금융·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전 세계 물 부족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 해외사업 분야로는 수력발전, 물 공급, IWRM 등이 있으며 아태지역, Europe, MENA, 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 project developing, sponsor, engineering service 등을 수행하고 있음

세션 VI SOEs in the Oil Industry

한국석유공사는 E&P사업, 석유비축, 주유소 운영, 유류정보 제공 등 크게 4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동북아시아 오일허브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 비축량을 증가시킬 계획으로 안정적 석유공급 및 리스크 완화를 기대함. 멕시코 석유와 전기 공사인 PEMEX와 CFE는 국가재정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정부 예산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3년 헌법개정 및 2014년 에너지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의 공공기관 운영은 비효율성과 방만경영을 해결하고 민간과 동일한 수준의 효율성에 도전하고 있음.

- **사회자:** 하세정 (정책연구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제자:** 박은정 (국제협력팀 과장, 한국석유공사)
Ron Snipeliski (Director General, Ministry of Finance and Public Credit, Mexico)

[발제 1]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박은정

- (한국 석유자원의 중요성) 한국의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석유의존도 역시 2030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자력의 의존도는 당초 41%에서 25% 내외로 축소가 예측됨
- (한국석유공사) E&P사업(주로 해외), 석유비축, 주유소 운영(약 1,145개), 유류정보 제공 서비스(국내사용량, 유가 등) 등 4개의 주요 사업 분야를 보유함
- 석유공사는 과거 콜롬비아에 진출했다가 철수하였으며 현재 베네수엘라와 페루에 진출해 있음
- (전략적 석유비축(량)) 총 9개 시설로 1억 4,600만배럴(bbl) 비축이 가능하고 석유파동 발생 시 비축량 방출로 안정적 석유공급이 가능함
- (동북아시아 오일허브 프로젝트) 지리적 이점 활용을 위해 여수, 울산에 추가비축시설을 추진 중에 있음

[발제 2] PEMEX(석유) & CFE(전기)의 개혁: 멕시코

Ron Snipeliski

- (법령 개정과 개혁) 2013년 헌법 개정 및 2014년 에너지관련 법령의 개정
 - 전통적으로 멕시코의 에너지부문은 독과점의 형태로 하나의 기업이 발전, 배전, 송전 등 모든 과정을 관리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분리된 상태임. 이번 개혁을 통해 민간과 동일한 수준의 효율성에 도전하고 있음

- (PEMEX 및 CFE 개혁) 법적 제도화 및 새로운 경영방식의 도입
 - (법적 제도화) 현실적인 문제인 생산성, 책임성, 투명성 향상에 초점을 맞춤. 특히 두 기업은 국가재정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 최소화가 큰 도전 중 하나임
 - (새로운 경영방식) 정부의 조정통제에 대한 변화를 주었지만 자원의 소유권, 탐사권, 양허계약 등 일부는 정부독점을 유지함

- 변화된 경영구조
 - (이사회 구성) PEMEX는 5인의 이사 및 5인의 외부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CFE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의 이사, 4인의 외부이사 및 직원이 임명하는 이사 1인으로 구성
 - (감사위원회) 공무원 신분인 아니며, 개헌헌법에 새로이 명시되어 정치와 분리됨. 특히 개헌 이후로 감사위는 처벌이 아닌 감사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더불어 외부감사 및 국정감사도 받게 됨
 - (정부의 명확한 지위 규정) 실질적으로 정부는 소유권(ownership)을 가지지만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관리인에 의한 기업의 운영을 보장해야 함. 정부는 두 기업의 부채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보조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함

세션 Ⅶ Trade and Investment Financing for Korea-LAC Business

한국수출입은행은 ECA(Export Credit Agency) 기능을 수행하며 PF 부문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긴밀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세계 각지의 거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파이낸싱 종결까지 전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1987년에 만들어진 EDCF 제도를 통해 각국의 산업 개발, 경제안정, 개발 관련 경험 및 지식 공유 등을 지원하고 있음. 중남미 국가에 대해서는 기금 규모를 확장하고, 양자 교류 규모를 확대하며, IDB와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사회자:** 하세정 (정책연구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제자:** 이진 (사업개발부부장, 한국수출입은행)
김주환 (중남미아프리카부 차장, 한국수출입은행)

[발제 1] Korean Export Credit Agency

이진


- (Export Credit Agency 기능) 최근 PF 부문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세계 각지의 거대 프로젝트 진행 중이며, 파이낸스 패키지를 통해 금융뿐만 아니라 컨설팅도 진행
- 수출금융 관련 전 세계 인프라군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중남미에도 1,300만달러 규모의 금융을 지원함

[발제 2] EDCF Activities in LAC Countries

김주환

- EDCF 제도는 1987년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산업개발, 경제안정, 개발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이 목적임
 - 양자 간 경제협력을 제공하고, 수혜국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 세계 377개 프로젝트, 11.6조원을 지원하였고 중남미의 경우 24개 프로젝트, 6.6억달러 규모 지원

□ EDCF 계약을 통해 필요자금의 100%까지 저리로 지원 가능

- 금리는 수혜국의 인구, 국민소득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최대 40년, 거치기간은 최대 15년임
- 한국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특히 선호하며, 이 경우 최저 0%의 특혜금리 적용 가능, 한국 중견기업·대기업 참여의 경우 최대 50% 금리 혜택 부여 


-
1. 해당 원고는 출판을 위해 편집되었으며 본 국제회의 회의록 원본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oe.kipf.re.kr/kor/trend/Focus_View.aspx?serial_no=523472)
 2. 본 국제회의 참석자들 발표는 대부분 스페인어로 진행되었으며, 회의록은 동시통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정보 표현이 부정확할 수 있음

2015 공공기관 정책 워크숍 개최



- 일 시 : 2015. 11. 5 ~ 6 (목~금)
- 장 소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
- 주 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 후원기관 :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공공기관연구센터는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후원으로 지난 11월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2015 공공기관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 워크숍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교육 및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통해 공공기관 평가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공공기관 관리 이슈 전반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2010년을 시작으로 매년 열고 있다.

이번 정책워크숍에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공공혁신기획관, 정책총괄과장, 제도기획과장, 평가분석과장, 경영정보과장 등 정부 주요 관계자, 경영평가단 단장을 비롯한 주요 위원 및 공공기관 실무 담당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경영평가제도 개선 사항을 전달하고 2015년도 공통 비계량지표 평가매뉴얼(안)에 대한 기관들의 의견 수렴이 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공공기관 통합공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등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설명 및 기관 사례발표 등이 있었으며, 정책결정자와 실무자들 간 의미 있는 자리였다. 

편집위원

이원희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편집 총괄)
김신정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실무 총괄)
박성훈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이슈 & Talk)
유승현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전문가의 눈)
박미선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기관장 인터뷰)
민경석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현장의 소리)
서니나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정책동향)
송신형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해외동향)
임희영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센터소식)

※ 「KIPF 공공기관 이슈 포커스」의 모든 콘텐츠는 공공기관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soe.kipf.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044-414-2291)

2015. 12 Vol. 14

KIPF 공공기관 이슈 포커스

2015년 12월 1일 인쇄
2015년 12월 5일 발행

발행인 박 형 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 044-414-2114(대표)
<http://soe.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인 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ISBN 978-89-8191-786-9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